

PHI Annual Report 2017

시민건강실록 2017



2017시민건강실록

노동건강연대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시민건강증진연구소
PEOPLE'S HEALTH INSTITUTE

PHI Annual Report 2017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보 2017

2017 시민건강실록

출판일		2018년 2월 25일	
편집인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공동저자 (가나다 순)		김명희 김세롬 김 선 김성이 서상희 손정인 이주연 전수경 조원섭 최예용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초빙연구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펴낸 곳		(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3길 36, 2층 전화: 02-535-1848 팩스: 02 581-0339 누리집: www.health.re.kr 전자우편: phikorea@gmail.com ISBN	979-11-87195-06-1 (PDF)

머리말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세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노동건강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함께 했습니다.

매년 작업을 할 때마다, 세상에 이게 다 1년 동안 일어난 일이란 말인가 새삼 놀라게 됩니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구속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오래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여전히 2017년의 일이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사고들 중 교훈과 의미가 없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에, ‘건강/보건의료’와의 직접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큰 이슈들만을 선별하여 실록에 담았습니다. 예컨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나 포항 지진, 병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력 사건들은 실록에서 다루지 못한 중요 이슈들입니다. 연구역량을 좀더 강화하여, 다음 실록에서는 주요 건강/보건의료 이슈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없이 현재가 흘러간 후,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나간 시간을 되짚어보며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새로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17 시민건강실록』을 통해, 오늘날 그리고 미래 세대의 독자들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2017년을 돌아보고 각자의 삶을 해석하며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25일

〈 차례 〉

2017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1
1. ‘촛불정부’의 출범과 건강정책 환경의 변화	2
1.1. 주요 동향	2
1.2. 논평	12
2.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은 아직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16
2.1. 현황 : 촛불이 닿지 못한 광장 뒤편의 죽음	16
2.2. 논평	20
3. 의료정보와 프라이버시	23
3.1. 동향	23
3.2. 논평	27
4. 젠더불평등과 건강	29
4.1. 현황	30
4.2. 논평	35
5.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참여할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37
5.1. 현황	37
5.2. 논평	40
6. 10차 개헌 논의와 건강권	42
6.1. 현황	42
6.2. 논평	45
7. 모두의 건강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 정부의 대활약	47
7.1. 주요 사건들	47
7.2. 논평	54
8.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56
9. HIV 감염과 차별, 그리고 건강	64
9.1. 현황	64
9.2. 논평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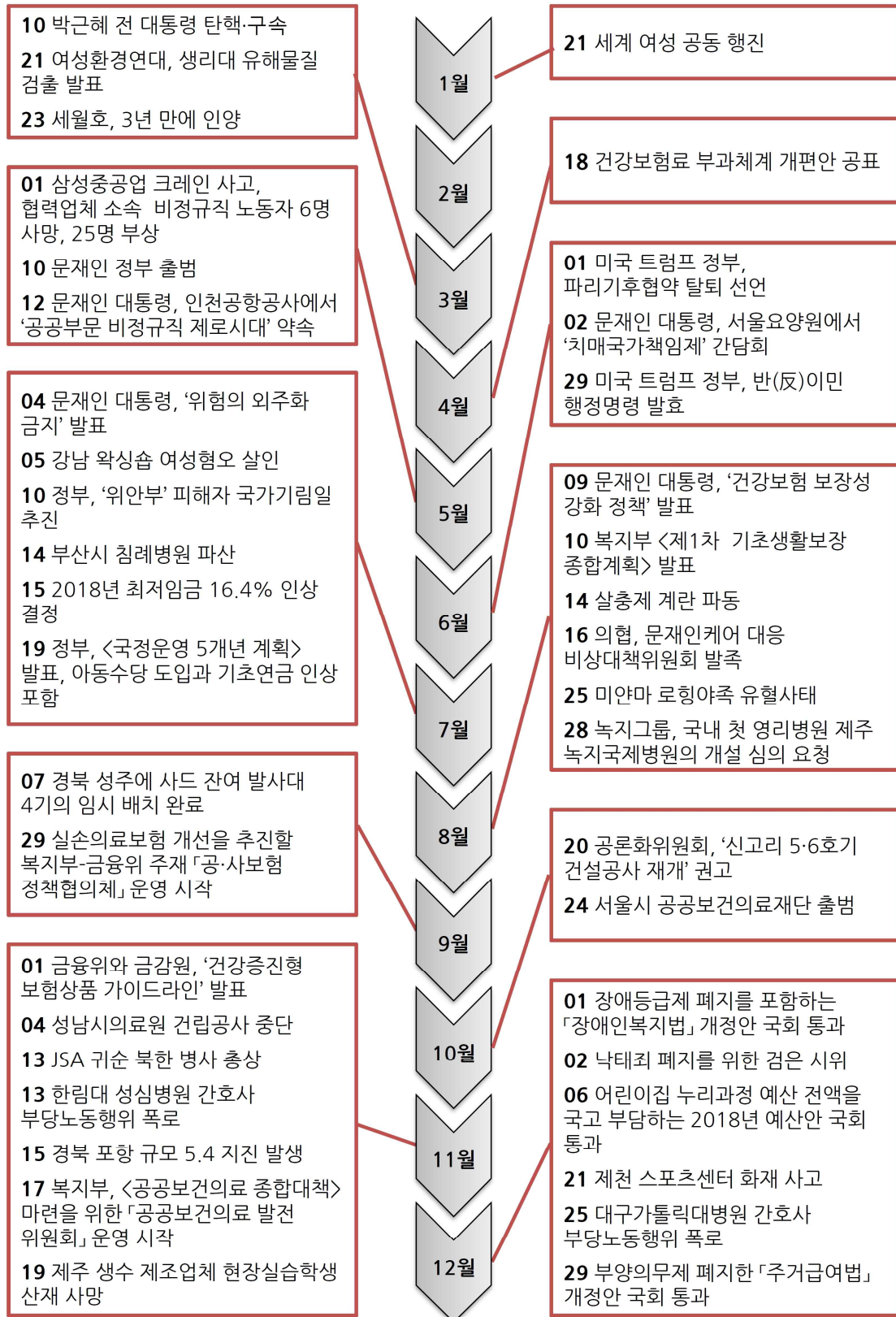
<표 차례>

표 1 새 정부의 2017년 주요 행보 - 소통과 참여	5
표 2 새 정부의 2017년 주요 행보 - 일자리	7
표 3 새 정부의 2017년 주요 행보 - 건강보장	11
표 4 2017년 새 정부의 건강정책에 대한 사회복지 시민단체 (1)의 입장	14
표 5 2017년 새 정부의 건강정책에 대한 사회복지 시민단체 (2)의 입장	15
표 6 2017년 새 정부의 건강정책에 대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입장	15
표 7 2017년 주요 환경보건사건 특징	59

<그림 차례>

그림 1 문재인 대통령 주요 연설 ‘단어 구름’ 분석 결과	2
그림 2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	3
그림 3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국정목표-국정전략-국정과제	4
그림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기본 원칙과 방향	6
그림 5 껌서브 쓰레스터 씨의 유서	16
그림 6 고공농성 노동자들	17
그림 7 촛불 이후 우리는, 절망의 말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18
그림 8 “대형 건설사 실적, 웃었다”	19
그림 9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25
그림 10 이국종 교수 “JSA 귀순 병사 배에 기생충 엄청나...상처부위 잡아먹어”	26
그림 11 전 세계의 페미니즘 열풍	29
그림 12 현재의 오바마 케어와 공화당 개혁안에 따른 건강보험 미가입자 숫자 추계	50
그림 13 시민들이 뽑은 ‘가장 중요한 국내 환경보건뉴스’	56
그림 14 2017년 9월초, 과천시 학부모들의 석면 항의집회	58
그림 15 HIV/AIDS에 대한 사회의 시선	64
그림 16 에이즈를 다룬 일간지 만평	65

2017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1. ‘촛불정부’의 출범과 건강정책 환경의 변화

1.1. 주요 동향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은 의심할 바 없이 ‘촛불혁명’의 결실이었다. 두 달 뒤 치러진 ‘장미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른바 ‘촛불정부’의 출범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라다운 나라”와 “새로운 세상”을 약속했다.¹⁾

새 정부 출범이 건강정책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건강권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초점을 두고 새 정부의 2017년 주요 행보를 살펴봤다.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취임 후 주요 연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청와대가 꼽은 2017년 10대 성과²⁾ 등을 근거 자료로 삼아 ① 소통과 참여, ② 일자리, ③ 건강보장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살펴봤다 (그림1).



그림 1 문재인 대통령 주요 연설 ‘단어 구름’ 분석 결과
(출처: 한국경제 뉴스래빗 데이터텔링)

1) 소통과 참여

대통령은 후보시절 2순위 공약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선거대책위원회

1)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전문 (연합뉴스 2017.05.10. <https://goo.gl/1emgPu>), 한국경제 뉴스래빗 “[데이터 텔링] '나라' '오늘' '시작'...문재인 취임사 3대 키워드” (2017.05.10. <https://goo.gl/wi4PHi>)
2) 매일경제 2017.12.29. 靑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 10대 성과는` (<https://goo.gl/uGKRG7>)

에 ‘국민참여본부’를 두고, ‘문재인 1번가’,³⁾ ‘문재인 펀드’,⁴⁾ ‘국민의원 캠페인’⁵⁾ 등 일련의 ‘국민참여형 선거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 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6개 분과와는 별도로 ‘국민인수위원회’를 두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운영한 ‘문재인 1번가’를 본떠, ‘광화문 1번가’라는 이름의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창구를 운영했다. 두 달여 간 총 18만여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고, 검토 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최초의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계획’이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촛불혁명’에 따른 ‘국민주권 시대’라는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찾았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하에, 5대 국정목표로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 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그림2,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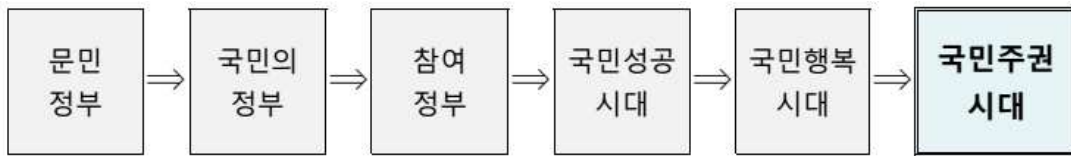


그림 2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07.19.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https://goo.gl/KkQm2M>)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함께 ‘광화문 1번가’가 종료된 뒤에는 청와대 누리집에 상시적으로 국민청원 및 제안을 할 수 있는 ‘국민소통 광장’이 신설됐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변을 한다. 2018년 2월 4일 현재, 총 6건의 청원⁶⁾이 답변되었고 4건의 청원⁷⁾이 답변 대기 중이다 (표1).

- 3) ‘대한민국 최초 정책 쇼핑몰’이라는 콘셉트의 공약 홍보 누리집
- 4) 대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출시한 것으로, 대선이 끝난 뒤 이자를 더해 상환했다.
- 5) 정책 제안을 문자로 보내면 관련 공약 내용과 함께 ‘국민의원’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 6)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권역의상센터 지원, 주취감경 폐지, 「전기·생활용품안전 관리법」 개정 또는 폐지
- 7) 가상화폐 규제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중형,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상 12대 중과실 적용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그림 3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국정목표-국정전략-국정과제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07.19.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https://goo.gl/KkQm2M>)

표 1 새 정부의 2017년 주요 행보 - 소통과 참여

2017.03.21.	정책 제안을 문자로 보낼 수 있는 휴대전화 개통 (일방향 소통)
2017.04.17.	‘대한민국 최초 정책 쇼핑몰’이라는 콘셉트의 공약 홍보 누리집 ‘문재인 1번가’ 개설
2017.04.19.	대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문재인 펀드’ 출시
2017.04.22.	정책 제안을 문자로 보내면 관련 공약 내용과 함께 ‘국민의원’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원 캠페인’ 시작 (쌍방향 소통 표방)
2017.05.25.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를 두고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창구 ‘광화문 1번가’ 개설
2017.07.19.	‘국민인수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국민주권 시대’ 규정,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 목표 제시
2017.08.17.	청와대 누리집에 상시적으로 국민청원 및 제안을 할 수 있는 ‘국민소통 광장’ 신설

2) 일자리

대통령은 후보시절 1순위 공약으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취임사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업무지시 1호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신설했다. 집무실에는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다.⁸⁾ 일자리위원회는 이후 <일자리 100일 계획>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림4).

8)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시스템은 시민들을 위해 인터넷에도 개방되었다. (<https://goo.gl/VxGc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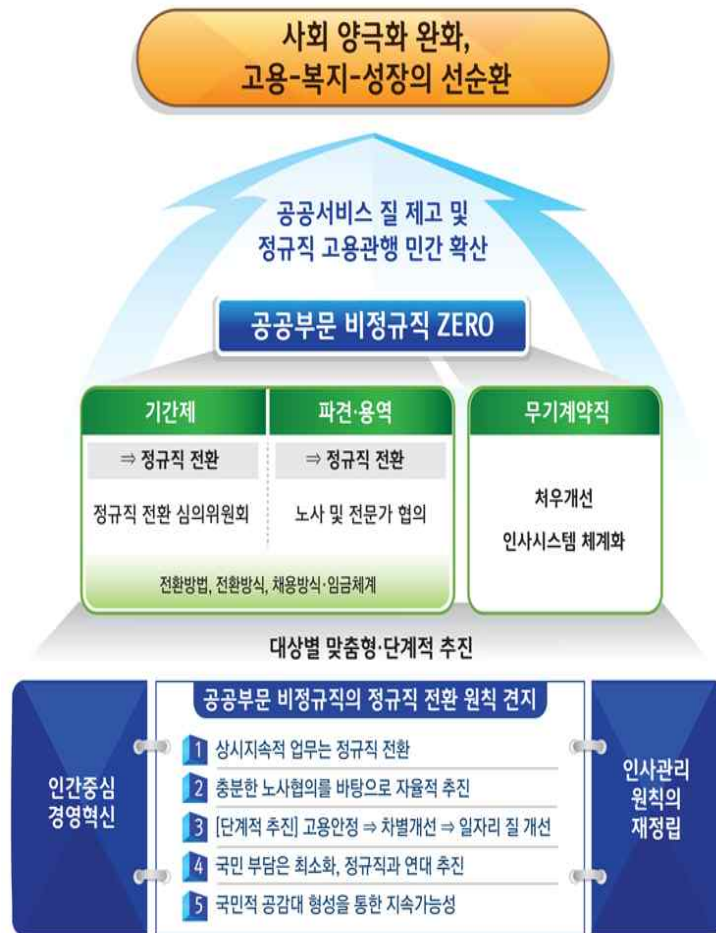


그림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기본 원칙과 방향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7.08.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https://goo.gl/u4P3kv>)

첫 외부 일정으로는 ‘찾아가는 대통령 1탄’이라는 콘셉트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근로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다. 두 달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기간제와 파견·용역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은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기본 원칙과 방향이 제시됐다.

“당선되면 곧바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던 약속대로,⁹⁾ 취임 후 첫 추경은 이른바 ‘일자리 추경’으로 편성했다. 11조 2천억 원을 들여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천개, 민간부문 일자리 3만 9천개 등 1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9) 한국경제 뉴스레빗 “[마인드맵] '대통령' 문재인 의 34가지 약속... 이젠 5년치 숙제” (2017.05.10 <https://goo.gl/udyNxT>)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도 불사했다. 청년 실업, 소방관과 우체국 집배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예로 들면서,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일자리”이고 유일한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록 “응급처방”일지라도, 추경을 통해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 심화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도 선언했다. 정부의 노력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도 덧붙였다.¹⁰⁾ 여소야대 형국에서 추경안은 국회에 45일간 계류되며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통과됐다.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 역대 최고의 인상금액이라는 최저임금 인상도 있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공약이 실현되려면 매년 15.7%씩 인상돼야 하는데,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다음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발표됐다. ①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② 고용감소 방지, ③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이라는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표 2 새 정부의 2017년 주요 행보 - 일자리

2017.05.10.	업무지시 1호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2017.05.11.	청와대 일자리수석 신설
2017.05.12.	인천공항 방문해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
2017.05.24.	청와대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설치
2017.06.01.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2017.06.12.	‘일자리 추경’안 국회 제출, 시정연설
2017.07.15.	2018년 최저임금 2017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
2017.07.16.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2017.0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2017.07.22.	‘일자리 추경’안 국회 통과
2017.10.18.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10) 문재인 대통령 2018년 추경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전문 (한겨레 2017.06.12. <https://goo.gl/X9BeXh>), 한국경제 뉴스레빗 “[데이터텔링] '청년', '국민'보다 많았다...문재인 '5대 약자' 추경” (2017.06.12. <https://goo.gl/EEo2DL>)

3) 건강보장

대통령의 2018년 신년사 제목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였다. 치매 환자 가족, 창업에 실패한 청년, 직장 맘을 예로 들면서,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삶의 질’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와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을 포함,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¹¹⁾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

취임 두 달 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상징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¹²⁾ 이에 따라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가 10~20%에서 5%로 인하됐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추진할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주재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도 시작됐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① 실손보험료 인하, ② 상품구조 개편, ③ 비급여 관리 강화, ④ 소비자 권익 강화라는 네 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¹³⁾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력 반대에 따라,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2018년 2월 4일 현재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심사체계 개선”과 “수가 적정화”를 논의 중이다.¹⁴⁾

11)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전문 (경향신문 2018.01.10. <https://goo.gl/7ja44J>), 한국경제 뉴스레빗 “[데이터 텔링] 삶·평화·일자리·한반도·춧불·혁신… 문재인 신년사 6대 키워드” (2018.01.10. <https://goo.gl/21qv4c>)

12)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문 전문 (경향신문 2017.08.09. <https://goo.gl/BQQpbo>)

13) 복지부 보도자료 2017.09.2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https://goo.gl/BAmoTD>)

14) 복지부 보도자료 2018.01.19.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제6차 논의 결과” (<https://goo.gl/XpE3E9>)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새 정부 출범 두 달 뒤 취임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취임 보름째,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18-'20년)>을 발표했다. 취임 한 달째에는 장애인·빈곤 단체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농성장을 방문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관련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는 10월 20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는 10월 26일부터 운영 중이다.¹⁵⁾ 11월 1일부터는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고, 12월 29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공공보건의료와 의료전달체계

11월 17일,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원회」 운영을 시작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¹⁶⁾ 이후 5년만이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감염병 및 재난·응급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표방하였으며, 학계, 지방정부 공공기관, 복지부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2018년 상반기 중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¹⁷⁾

한편 전 정부에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2018년 1월 18일, 14차 회의를 끝으로 2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협의체는 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 학회, 전문가, 정부 및 관련기관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2016년 1월 15일부터 총 14차례 회의 및 5차례 소위원회회를 개최했다.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를 둘러싼 의협과 병협 간 이견으로 최종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후 의협과 병협이 비공식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상태다.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병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단기입원 대체 제도로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단기입원병상을 지속적으로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¹⁸⁾

15) 웰페어뉴스 2017.20.1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민관협의체, 운영 전반 사안과 향후 일정 논의” (<https://goo.gl/Pjp9pc>)

16)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 ‘설립 및 소유’의 관점에서 ‘기능’ 관점으로 재정의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정의하여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17) 복지부 보도자료 2017.11.17.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원회」 운영 시작” (<https://goo.gl/xVXBTD>)

18) Medical Observer 2018.01.30. “의료전달체계 개선 불씨 살았다” (<https://goo.gl/v96dYf>)

- ‘무상보육’,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대통령은 후보시절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무상보육’),¹⁹⁾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 부담하는 2018년 예산안이 8월 29일 국무회의를, 12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계획은 8월 16일 발표됐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안이 2018년 2월 4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17년 13%에서 '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8~2022)>이 12월 27일 발표됐고, 2018년 2월 1일, 교육부와 복지부가 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원칙을 합의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의 반대로 국회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기초연금 인상과 치매 국가책임제

취임 3주 째, 대통령은 ‘찾아가는 대통령 3탄’이라는 콘셉트로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종사자들을 만났다. 후보시절 ‘문재인 1번가’의 ‘인기상품’ 중 하나였던 ‘치매 국가책임제’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 자리였다. 세 달 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으로 ① 맞춤형 사례관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③ 치매 환자 의료지원 강화, ④ 요양비·의료비 부담 완화, ⑤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⑥ 치매 연구개발 등이 포함됐다.

한편 ‘기초연금 30만원 차등 없이 균등 지급’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기초연금 인상계획이 8월 16일 발표됐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2월 4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현행 약 20만원을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이다.

19)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누리과정 비용을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한다고 공약했으나 취임 뒤 입장을 바꾸면서 매년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새 정부는 누리과정 총예산 가운데 유치원 비용은 기존대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2017년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41%만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9%는 지방교육청이 부담했었다.

표 3 새 정부의 2017년 주요 행보 - 건강보장

2017.05.25.	교육부, 국정기획자문위에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보고
2017.06.02.	대통령, 서울요양원 방문해 ‘치매 국가책임제’ 설명
2017.07.25.	신임 복지부 장관 취임
2017.08.09.	대통령,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 (이른바 ‘문재인 케어’)
2017.08.10.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18~’20년)> 발표
2017.08.16.	아동수당 도입계획과 기초연금 인상계획 발표, 「아동수당법」 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7.08.25.	복지부 장관, 광화문 농성장 방문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약속
2017.08.29.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 부담하는 2018년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2017.09.18.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2017.09.29.	복지부-금융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시작
2017.10.01.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10~20% → 5%로 인하
2017.10.20.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운영 시작
2017.10.26.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시작
2017.11.01.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7.11.17.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원회」 운영 시작
2017.11.30.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무산
2017.12.06.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 부담하는 2018년 예산안 국회 통과
2017.12.14.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운영 시작
2017.12.2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8~2022)> 발표
2017.12.29.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거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8.01.18.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14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 종료
2018.01.30.	의협과 병협, 비공식 실무협의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합의
2018.02.01.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 심의·확정

출처: 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 (2017.05.10.~2018.01.19.)

1.2. 논평

새 정부의 건강정책은 이른바 ‘문제인 케어’로 대표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권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초점을 두면, ‘의료 보장’을 넘어 ‘건강 보장’에 주목하게 된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는 물론이고, 무상보육, 치매 국가책임제, 일자리 정책과 시민참여 역시 중요한 건강정책들이다.

새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다른 말로 하면 ‘건강’)을 중심에 두고, 특히 청년, 여성, 아동, 노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것,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자리의 ‘양’만이 아닌 ‘질’을 높이려 하는 것,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초점,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개별 정책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급여를 해소하기 위한 공급 차원의 대책이 없고,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틀을 넘어선 상병수당의 도입이나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의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의·정 협의체’라고 하는 비민주적 거버넌스의 도입·운영도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안으로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문제인 케어 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가능하게 할 보건의료의 공공성 문제는 후보시절 공약이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으나,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원회」를 운영 중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어린이 재활병원’, ‘치매 안심병원’, ‘감염병 전문병원’과 같은 특수병원의 지정·설립,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병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좀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버전만 바꾼 ‘성장동력’론, 폐기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과 허가 철회되지 않고 있는 제주영리병원, 민간의료보험의 ‘퇴출’이 아닌 ‘상생’을 꾀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참여정부 시절 시작된 의료상업화/영리화의 연장선에 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과 자진사퇴),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은 이러한 의구심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보건의료를 벗어나면,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비판,²⁰⁾ 노-노 갈등만 낳았다는 비판,²¹⁾ 공기업의 특권적 지위를 강화시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²²⁾ 청년 실업 대책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대졸 청년을 상정하여 결국 고졸 근로빈곤 청년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²³⁾

새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의료상업화/영리화와 불평등에 대한 안이한 인식 혹은 의도적 무지는 자유주의 정부의 근본적 한계일지 모른다. 새 정부 건강정책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사실 보수정부조차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 아닌가.

20) 오늘보다 “문재인 1호 정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왜 이렇게 후퇴했나?” (2018/01 제36호. <https://goo.gl/Nei8No>)

21) 월간 위커스 “노노갈등만 남은 문재인 정규직화” (2017.12.27. <https://goo.gl/TK8yTQ>)

22) 정이환 교수 인터뷰 “공기업이 특권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사인 2017.12.27. <https://goo.gl/GjnEaf>)

23) 한국일보 기획기사 “잊혀진 청년들” (2017.12.02. <https://goo.gl/uek3bW>)

표 4 2017년 새 정부의 건강정책에 대한 사회복지 시민단체 (1)의 입장

2017.05.22.	[기자회견]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17.05.22.	[논평] 어린이집 급식비 부담 이용 무죄로 드러난 보육료지원 방식 문제점 개선하라
2017.05.26.	[공동논평] 새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환영한다
2017.06.07.	[기자회견]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2017.06.08.	[기자회견]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빈곤 해결 촉구
2017.06.20.	[논평]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2017.07.05.	[기자회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국정기획자문위 면담요청
2017.07.12.	[논평]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 환영한다
2017.07.19.	[기자회견] 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요구 기자회견 개최
2017.07.25.	[기자회견]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2017.08.10.	[공동성명]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2017.08.10.	[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2017.08.11.	[공동논평]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비판
2017.08.30.	[기자회견]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2017.08.30.	[논평]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장성 강화를 기대한다
2017.09.14.	[공동성명] 아이들을 불모로 하는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 당장 철회하라!
2017.10.30.	[기자회견] 개인정보 유출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2017.11.02.	[기자회견] 사회서비스공단 예산 반영과 공공 돌봄 확대 요구
2017.11.03.	[기자회견]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7.11.09.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2017.11.26.	[성명]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가로막는 일부 의료공급자들의 비윤리적 행위 규탄한다
2017.11.27.	[공동성명]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신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7.12.01.	[논평] 초등학교 유희교실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2017.12.04.	[성명] 보편적 아동수당은 정략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2017.12.27.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2017.12.29.	[공동성명]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2018.01.09.	[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2018.01.09.	왜 한국 병원은 간호사를 쥐어짜게 됐나
2018.01.14.	[논평] 국회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적극 협조하라

출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누리집 '문재인'으로 검색 (2017.05.10.~2018.01.19.)

표 5 2017년 새 정부의 건강정책에 대한 사회복지 시민단체 (2)의 입장

2017.05.18.	[내만복 칼럼] 문재인표 '5대 소득 보장' 정책, 성공하려면?
2017.06.22.	[내만복 칼럼]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처참한 수준이다
2017.06.30.	[내만복 칼럼] 부양의무제, 이제는 폐지하자
2017.07.19.	<논평: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복지국가 설계도로 빈약한 국정계획
2017.07.27.	[논평] 담뱃세 논점, '인하'에서 '사용처'로 전환하자
2017.08.09.	[논평]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보장성 강화 긍정적이나 목표수준 낮아
2017.08.10.	[논평]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다더니
2017.08.17.	[내만복 칼럼] 문재인 케어, 조금 더 용기를 내야 한다
2017.08.29.	<논평: 2018년 예산안> 재정지출 늘리나 세입개혁엔 소극적
2017.09.21.	아동그룹홈을 없애든지, 차별을 없애든지
2017.09.28.	연금 보험료 채납은 사업자가, 그 피해는 노동자가
2017.10.16.	<논평: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신청 포기하는 이유>
2017.10.19.	[내만복 칼럼] 헬조선 '한 평 괴담'...소득 절반 집세로 날린다
2017.10.20.	[제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에 열자!
2017.10.26.	[내만복 칼럼] 민간보험 문제도 공론화위에서 논해보자
2017.11.15.	<제안> 최저임금 인상만큼 호스피스 간병수가 올려라!
2017.12.01.	[논평] 주거복지로드맵으론 서민주거 해결 어렵다
2017.12.03.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헌법소원
2017.12.07.	<논평 : 2018년 복지 예산> 복지예산 감액하고 SOC 늘린 국회
2017.12.08.	<성명>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삭감 규탄한다!
2017.12.08.	<성명>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반대, 명분없다
2017.12.21.	[내만복 칼럼] 고졸 청년의 삶은 더 고달프다
2017.12.28.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2018.01.02.	[경향] 문재인케어위원회 만들자
2018.01.25.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2018.02.01.	[경향] 민주노총, 사회연대노총으로

출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누리집 '문재인'으로 검색 (2017.05.10.~2018.02.05.)

표 6 2017년 새 정부의 건강정책에 대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입장

2017.08.10.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인데 왜 건강보험 보장성 방안은 후퇴하는가
2017.08.26.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반대한다
2017.10.11.	[공동성명]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2017.11.02.	의료민영화 첫 빚장을 여는,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조치 폐기하라!
2017.12.2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2018.01.05.	[논평] 건강보험공단은 존립이유 망각하지 말고 온전히 가입자 입장에 서라
2018.01.06.	문재인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
2018.01.09.	왜 한국 병원은 간호사를 쥐어짜게 됐나

출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누리집 '문재인'으로 검색 (2017.05.10.~2018.01.19.)

2.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은 아직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1. 현황 : 촛불이 닿지 못한 광장 뒤편의 죽음

- 5년간 500명, 이주노동자들의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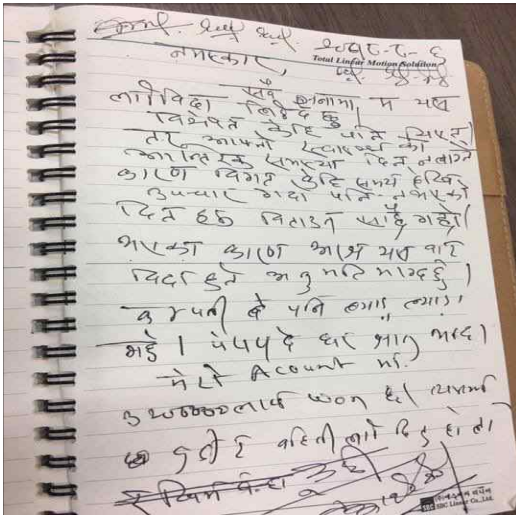


그림 5 켄서브 쓰레스터 씨의 유서
(2017년 8월 7일, 청주네팔쉼터, 매일노동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과 작별인사를 합니다. 제가 세상을 뜨는 이유는 건강문제와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허락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됐습니다. 제 계좌에 32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제 아내와 여동생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7일, 충북 충주의 기계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네팔 이주노동자 켄서브 쓰레스터(Keshav Shrestha) 씨가 기숙사 옥상에서 목을 매 숨졌다. 쓰레스터 씨는 회사를 옮기거나 고향에 다녀오고 싶어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고용허가제(E9 비자제도)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는 스스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으며, 회사가 폐업하거나 노동조건을 위반한 사용자의 책임이 있어야만 옮길 수 있다.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하던 그는 6월에 경북 지역 네팔 이주노동자 세 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힘들어했다고 한다. 쓰레스터 씨의 죽음 이후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살을 택한 이주노동자들은 네팔만 하더라도 21명으로 사망원인 중 1위”라고 한다. 9월에 진행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이주노동자 511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해마다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일을 하다 죽었다. 내국인 노동자의 6배다. 최근인 12월 15일에도 부산에서 공장 컨테이너에 잠자던 베트남 노동자가 화재로 숨졌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 여전히, 위험한 곳에 올라 말을 건네는 노동자들

11건의 고소·고발과 세 번째 징계를 앞두고 있던 42세 한광호 노동자, 그는 2016년 3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53일 동안 그의 장례를 미루고 싸워온 노조는 2017년 3월 4일 드디어 장례를 치렀다. 이들이 속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유성기업 회장이 2월에 노조파괴행위로 법정 구속되고 나서야 가능했던 일이다.

4월 11일에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전영수, 이성호가 노동기본권과 블랙리스트 문제로 고가차도 교각에 올랐다. 이들은 107일을 하늘에서 버틴 후 내려올 수 있었다.

4월 14일부터 27일 동안 서울 광화문사거리 광고탑에서 농성을 한 6명의 노동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대선 기간 동안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농성을 결행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함부로 쓰던 악성 사업장의 노동자들이었다.



광화문 고공농성장, 이인근 콜텍 노동자가 어깨, 목, 복부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긴급 후송되었다. (2017.05.05.참세상)



국회를 바라보며 요구안을 외치는 이영철, 정양욱 건설노동자 (2017.11.13., 노동과세계)

그림 6 고공농성 노동자들

“건설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올라왔다. 매일 국회를 바라보며 법 개정을 외치겠다.” 11월 11일 서울여의2교 광고탑에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올라갔다. 이들은 노동기본권과 퇴직금적립 등 사회안전망 보장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1년 동안 받을 전화를 다 받았다”고 말했다. 11월 28일 2만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여의도에 모인 날 이들은 땅으로 내려왔다. 11월 12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홍기탁, 박준호 - 두 명의 스타케미컬 노동자가 서울 양천구 열병합발전소 75미터 굴뚝에 올라갔다. 이들은 아직 굴뚝 위에 있다.

● 소리 없는 비명, 현장실습생과 알바노동자의 죽음

1월 22일,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홍수연 학생의 죽음, 10개월 후인 11월 19일 제주 음료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이민호 학생의 죽음이 있었다. 홍수연 학생은 ‘해지방어부서’라고 하는 노동강도가 높기로 악명높은 부서의 상담원으로 일했고, 이민호 학생은 정규 노동자가 맡아야 할 기계업무로 혼자 담당하다 사고를 당했다. 두 학생의 죽음



그림 7 촛불 이후 우리는, 절망의 말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유튜브화면 캡처)

사이 9개월 사이, 언론은 고등학교 1학년 16살부터 현장실습으로 용접을 시작하여 군대의 용접 사병을 거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취업해 용접 일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폐암에 걸려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기사를 실었다. 그는 용접 흙, 석면, 중금속, 분진 등에 10년 6개월 동안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벽두부터 가을까지, 서울 강남 선릉역에 위치한 CU편의점 본사 BGF리테일 앞에서는 매주 목요일 알바노동자들의 시위가 열렸다. CU편의점 알바노동자가 손님인 휘두른 흥기에 찢려 사망한 것이 그 전 해 12월이었다. 알바노동자들은 사과와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CU 본사 시위와 민사소송, 인권위 진정, 플래시몹 시위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알바노조에 의하면 전국 편의점에서 한 해 1만 건이 넘는 범죄, 2천 건이 넘는 강력·폭력 범죄가 벌어진다. 알바노동자들은 ‘카운터에 출구가 없고 접이식 출입구만 있’기 때문에 위험이 닥쳐도 피할 수 없으며, 안전·범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터이지만, 최저시급을 겨우 받을 뿐이며 4대 보험, 휴게시간 등의 기본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11월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환경미화원이 잇달아 사망했다. 가로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수거차량에 치여 숨졌고, 쓰레기수거차 기계장치에 끼여 숨졌다. 그런데 광주시와 노동계는 모두 안전교육여부만을 따져 물었다. 안전교육만 잘 받으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일까.

● 멈추지 않는, 기업의 노동자 살인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4~2016년 동안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총 24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이 그들이다.

2017년 12월, 노동부는 노동자 사망과 사고, 직업병이 많은 기업 748곳을 공표했다. 2016년의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이다. 삼성엔지니어링과 태영건설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고,

업체명	매출	영업이익
삼성물산(건설부문)	27,110(-2.9%)	910(흑자전환)
현대건설	41,297(-3.7%)	2286(10.4%)
대우건설	26,401(3.2%)	2211(171%)
GS건설	27,136(2.8%)	716(146%)
대림산업	25,114(11%)	1140(26%)
현대산업개발	11,331(15.6%)	1410(64.3%)

※ 출처: 각 건설사

그림 8 “대형 건설사 실적, 웃었다”
(2017. 5. 2. 이투데이)

GS건설, 현대중공업도 빠지지 않았다. 산재를 은폐한 곳으로는 현대건설의 신한울원자력 1·2호기 공사현장이 91건으로 단연 높았고, 엘지디스플레이, 코오롱인더스트리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08년 이래 10년 동안 검찰이 기소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은 총 33,648건이었다. 이 중 95.4%인 32,096건이 벌금형 약식기소였고 정식재판 사건은 4.6%인 1,552건에 불

과했다. 일반사건 기소율의 절반이라고 한다. 구속 기소된 사건은 0.6%, 단 아홉 건이었다. 10년 동안 말이다.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1,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죽었는데. 이들의 죽음이 이렇게 가볍게 다루어져도 되는 것인가.

2.2. 논평

● 파리바게트, 인천국제공항공사

5월 20일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감전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 갔다. ‘하청노동자가 사고를 당하면 원청은 일단 당사자 실수’라고 몰아간다고 당시 노동자들은 말했다.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가 잘 돼 있지만, 하청업체가 운영하는 곳은 그렇지 않다’고도 했다. 앞서 살펴본 광주의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사망 사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 원청은 노동자들이 새벽근무폐지, 유도요원 배치 같은 안전조치를 특별히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공무원은 노동자가 안전 교육을 잘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보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모델에 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가 직접고용에서 배제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직접고용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인천공항 감전사고와 광주 환경미화원의 사망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공공부문은 아니지만 직접고용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정이다. 동네마다 있는 파란색 빵집, 이곳에서 빵을 만드는 이들 5천여 명이 사실상 불법파견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노동부의 발표는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직장이, 일터가 직접고용과 불법파견으로 갈라져 있고, 임금은 물론, 휴게시간, 복장, 식사, 인간관계의 미세한 틈까지 위계와 차별의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진 상태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며 일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 대통령보다, 노동부장관보다

노동운동 동향까지 꼼꼼하게 챙긴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귀족노조’ 덮을 놓으려 동분서주했고, 메르스가 창궐할 때는 당사자 모임이 만들어질까 초조해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힘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할 때 노동문제에 깊이 관여했고, ‘노동자를 위한 연대’라는 노동조합 지원 조직(?)의 대표이기도 했던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김영주 노동부장관

또한 취임식 자리에서 ‘근로자’를 버리고 ‘노동자’로 호명하기 시작하였다. 헌법과 법률용어로 쓰였던 ‘근로’라는 용어는 개헌과 함께 무대 뒤로 사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7월 4일,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의 행사였던 ‘산업안전보건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그 자리에 참석한 청중들의 의식보다 훨씬 원칙적이고 올바른 말이었을 것이다. “열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어느새 익숙한 일이 되고 말았다” “산업현장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고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와 장치를 불합리한 규제로 간주해 왔다” 노동조합이나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가 말했다고 해도 믿지 않겠는가. 대통령의 이 말을 듣고 노동부장관과 관료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은 원청기업과 발주자에게 실질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어떤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 상황은 언론 보도만 보아도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산재 정책을 담당할 책임관료 자리가 계속 공석이다. 기술적이고 전문가 중심의 활동에 집중하여 균형 감각을 잃은 사회운동 단체들과 노동조합은 힘 있는 목소리로 노동부 관료의 공석 상태에 대해 질타하거나 적절한 인사를 추천할 만한 권위가 없다.

산업재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표현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기업, 특정 직종, 특정 질병 등을 끊임없이 세분화하면서 단기적 요구안을 만들어내는 현재 운동보다 지평이 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운동이 달라져야 한다.

●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을 찾아서

이주노동자가 너무 많이 죽고 있다. 어찌해야 할까? 촛불 이전에도, 촛불 이후에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바뀐 것은 별로 없다. 촛불이 불어넣은 변화의 바람에 비해서 노동 현장은 딱히 달라질 이유가 없고 동기도 없다. 노동자가 세력화되고 노동조합에 새바람이 불고 있지도 않다. 규모가 크든 작든, 그동안 기업들이 만들고 강제해 온 위계적, 권위주의적, 때로는 폭력적인 직장 문화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한데 굳이 왜 바꾸겠는가. 2017년 11월 1일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로 출범한 <직장갑질119>의 오픈채팅 대화방에는 한계치인 1,000명이 둘러앉아 직장, 노동현장의 재난상황을 알리며 끊임없이 벨을 눌러댄다. 그야말로 비명이다. <직장갑질119>의 오픈채팅 대화방을 방문해 보시라. 마음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몸으로 통증이 옮겨가는 직장인, 노동자들의 응급실이다. 상사와 사장, 회장, 이사들이 언어폭력, 물리

적 폭력, 성적 폭력을 휘두를 때 직장인, 노동자들은 깨어있는 시민이나 주체적 노동자로 자신을 다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혼자인 경우라면 거의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해고, 징계, 손해배상청구, 협박 같은 상황이 순식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진단하는 것이 글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가 <직장갑질119> 로부터 배운 것은, 운동의 언어, 전문가의 언어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찾자’고 말하는 것은 이미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직장인들, 노동자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걸려 있고, 시급이 걸려 있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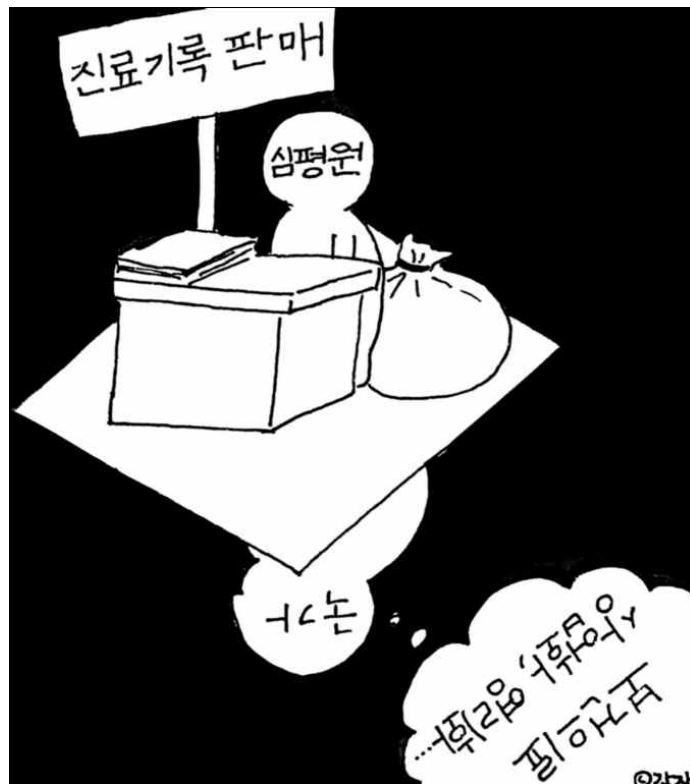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말을 찾아야 한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3. 의료정보와 프라이버시

3.1. 동향

-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영리적 이용

지난 해 10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표본 데이터셋’²⁴⁾을 민간 보험회사와 보험연구기관에 1건 당 30원씩 받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52건, 6,420명 분의 진료정보가 ‘보험상품 개발’과 ‘위험률(보험료) 산출’ 등의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다. 민간 보험회사와 보험연구기관이 데이터셋 사용 신청 이유로 ‘보험상품 개발’ 등을 직접 명시했다는 점, 심평원이 “표본자료는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는 내용의 ‘학술용 표본자료 이용 서약서’를 제출받았다는 점에서, 심평원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영리 활동에 이용하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²⁵⁾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https://goo.gl/f6zPgm>)

25) 경향신문 2017.10.24. [국정감사] 심평원, 6420만명 진료자료 보험사에 넘겨. (<https://goo.gl/FAMvY4>)

심평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4항에 근거하여 ‘비식별화’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빅데이터 산업화를 지지하는 측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하며,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의료법 개정으로 난관을 돌파해야한다고 주장했다.²⁶⁾

시민사회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사용과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건이 동법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가 정한, 공공데이터 이용이 제3자(보험가입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로 간주했다. 민간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서 보험가입을 원하는 시민들의 가입을 차별하는 데 악용할 소지가 있고,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의 빅데이터 제공을 일시 중단하고 빅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2016년 6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식별화된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²⁷⁾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단 비식별화된 정보는 개인에게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정보 유출과 재식별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소송을 통해 구제나 보상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²⁸⁾ 표본 데이터셋의 개인 진료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비식별화했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정의²⁹⁾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6) 데일리메디 2017.12.14.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글로벌 대세지만 심평원은. (<https://goo.gl/ZYAFEG>)

27)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 무단결합하여 금융회사와 민간 보험회사와 보험연구기관, 이동통신사 등에 제공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28) 경향비즈. 2017.11.05. 두 얼굴의 빅데이터, 당신의 개인정보는? (<https://goo.gl/zJRNt7>)

2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https://goo.gl/ELY5or>)

●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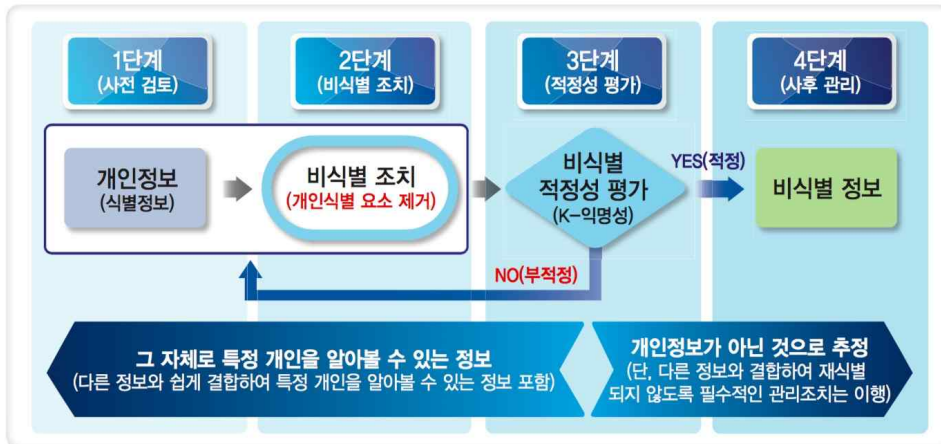


그림 9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참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개인건강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 의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에서 공공기관에 분산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계·활용을 활성화시키는 「(가칭)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정보화)”을 명목으로 약 115억 원을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재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³⁰⁾

● 비무장지대 귀순 병사와 기생충

2017년 11월 13일 비무장지대를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충상을 입은 북한 병사가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수술을 집도한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를 통해 한국 중증응급의료의 열악한 현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문제를 개선하자는 청와대의 ‘국민 청원 및 제안’ 코너에 28만 명이 넘게 참여하면서, 여야는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53% 증액하여 212억 원 늘리기로 합의했다.

30) 건강세상네트워크. 2017.11.06. [공동성명]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원 전액 삭감하라. (<https://goo.gl/JnZpxP>)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사회적 논쟁이 일어났다. 병사의 치료경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국종 교수가 치료 과정에서 ‘기생충’ 분변이 발견된 사실 등을 브리핑한 이후 선정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졌으며, 북한 병사의 응급 수술 장면이 CNN을 통해 독점 공개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환자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보수 정치인들과 언론, 네티즌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고 공개 사과하였다. 지난 12월 11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병사의 수술 및 신체 상태의 세부사항을 매우 참혹할 정도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 그의 프라이버시에 가해진 침해의 정도를 비난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인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지만³¹⁾,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에 관한 차분한 반성적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림 10 이국종 교수 “JSA 귀순 병사 배에 기생충 엄청나...상처부위
값아먹어” (출처: 조선일보 <https://goo.gl/8fmZi6>)

31) 경향신문. 2017.12.11. 북한인권보고관 "귀순병사 수술·신체상태 공개는 용납될 수 없는 일" (<https://goo.gl/BLG8tn>)

3.2. 논평

심평원이 민간 보험회사와 보험연구기관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판매한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일탈적 사건’이 아니다. 시민들이 수년 간 겪어온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비단 보건의료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정보부터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피해 내용도 다양하다. 이번 사건은 정부 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이윤창출에 적극적으로 조력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정치경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는 귀순 북한 병사의 진료정보에 대한 의료진과 언론, 정치인의 말과 글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개인의 진료정보는 필요하다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돈’이 된다면 ‘시장화-경제화-상업화’해서 팔아야하는 상품이 된지 오래다.³²⁾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전 동의’ 조건을 완화하고,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나 ‘제3자 제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쉽게 재식별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문제 외에도 환자의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낳는다. 질병 예방과 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인구집단 건강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 될 수 있을까? 공익 목적의 활용이라고 해도, 공공데이터로 제공/공개될 개인정보의 종류와 활용범위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필요성을 설득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사항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논의가 ‘의약 연구의 중요성 vs. 개인정보보호’의 대립 구도로 다뤄지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의약 연구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확보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공공기관에 분산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시키고 활용을 활성화시키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안은 보건의료 연구를 촉진시켜 질

32)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리플 논평. 2017.11.06. 심평원의 진료정보 장사, ‘사고’가 아니다. (<http://health.re.kr/?p=4118>)

병 예방과 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인구집단 건강수준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혁신의 대가로 개인의 권리가 마구잡이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4차산업이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달고 과거와 같은 개발독재식 발전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영국 NHS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케어닷데이터(Care.data)’를 2016년 7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벤치마크로 널리 홍보해왔던 사례였는데 말이다. 국가정보보호관 피오나 칼디코트(Dame Fiona Caldicott)는 케어닷데이터 폐지를 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우리사회도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³³⁾

“개인의 건강 진료정보의 사용에 대해 대중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그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들의 개인정보 사용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에 관한 논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허용할지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33) 가디언(The Guardian). 2016.07.06. “NHS to scrap single database of patients' medical details” (<https://goo.gl/rwxUF7>)

4. 젠더불평등과 건강

작년 우리 『2016 시민건강실록』은 2016년을 “(한국사회에서) 페미니즘 관련 논의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확장되고 주류미디어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기념비적인 해”로 명명했다. 여성살해(페미사이드 femicide)를 목도한 여성들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조건 자체가 절박한 생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SNS에서 거리에서 힘을 모았다.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과 젠더감수성이 사회 전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일상에 만연한 성차별들이 대중적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이나 웹툰 <며느라기>가 널리 읽히고 공감을 얻은 것은, 여성 각자의 사적인 체험이 사실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뿌리 깊고 체계적인 성차별과 편견으로 짜인 공적 질서가 강요한 것이었다는 깨달음 때문이기도 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등을 약속했다. 미국 타임(TIME) 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MeToo” 운동에 참여한 ‘침묵을 깬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 열풍은 거셌다.



#MeToo

(사진 출처: #metoo © surdumihail | Pixabay)



2017년 세계여성의 날에 모인 노동자들

(사진 출처: 노동자연대)

그림 11 전 세계의 페미니즘 열풍

4.1. 현황

● 결혼과 가정, 그리고 일

여성하향선택결혼권장_“안 낳아요”

시작은 2월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저출산대책 주제의 인구포럼이었다. 원종욱 선임연구원은 ‘혼인율 하락이 출산율이 하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혼인율을 올려야 한다’고 밝히며, 그 대책의 하나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상승한 여성들에게 ‘하향선택 결혼을 권장하는 사회규범 전환’을 은밀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발표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였다. 첫째, 성별 임금격차나 여성들이 고스펙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구조, 고학력 여성의 지적 사고를 외면했다는 것이고 둘째, 여성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 삶에 도전하는 경향성을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회귀시켜 젠더위계의 변화를 막으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런 퇴행적 ‘야심’에 대하여 여성들은 구구절절한 설명대신 “정부가 아무리 나대봐라 내가 결혼하나 고양이랑 살지”라는 통쾌한 응수로 받아쳤다.³⁴⁾

여성지원자_고의탈락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집중 수사 결과,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여성지원자를 고의로 탈락시키거나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³⁵⁾ 석탄공사는 서류전형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주고 면접에서 여성 전원을 탈락시켰으며, 가스안전공사는 합격대상 여성을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블라인드 채용했더니 합격자 전원이 여성이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³⁶⁾ 청와대 담당자조차 “관행대로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수 있다”고 했으니,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일할 기회를 박탈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34) 경향신문 2017. 2. 27일자. “정부가 아무리 나대봐라 내가 결혼하나 고양이랑 살지” (<https://goo.gl/78ySLG>)

35) 노컷뉴스 2017. 12. 20일자 “국회에서” “여자라서” 청탁·차별·뒤통 채용비리 30명 재판에 (<https://goo.gl/cQxwX2>)

36) 오마이뉴스 2017. 12. 13일자 청와대, 블라인드 채용해봤더니... 합격자 전원이 여성 (<https://goo.gl/7dhMYN>)

직장 내_여직원_성적대상화

힘들게 입사한 직장에서도 한국 여성들의 수난은 계속된다. 1년 내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재외공관장들의 성차별적 발언과 성희롱, 성폭력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하반기에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한샘, 한림대병원 사건은 주목할 만하다.

10월 29일 ‘네이트판’을 통해 가구업체 한샘 여직원이 동료로부터 불법촬영(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하고 이후 치유과정에서 다른 남성 직원들로부터 연쇄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알려졌다. 한샘은 이런 사실을 접수한 후에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해고 등을 언급하며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회유하고 성폭행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위한 허위진술을 요구했다. 가해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위협하며 고소 포기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봉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강간문화,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묻거나 비난을 돌리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기업의 처리방식을 보여준 전형적 사례였다.³⁷⁾ 악화된 여론과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직면한 회사는 사과입장을 발표했지만, 뉴스에서 사라질 썸에는 결국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가 조직을 떠나야 하는 전형적인 서사도 반복되었다.

‘직장갑질 119’와 페이스북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 숲’을 통해 한림대 성심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들이 재단행사에서 짧은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여성간호사들을 괴롭히는 임신순번제나 임산부 야간근무 같은 악습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마당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자존감을 훼손하게 만드는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은 여성 노동자들의 분노, 수치심, 두려움, 우울증 같은 정서반응은 물론 수면장애, 두통, 체중감소, 폭식 같은 신체반응, 그리고 근로의욕 저하, 자신감 저하, 대인기피 같은 인지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⁸⁾

● 낙태죄는 폐지될 것인가?

2017년 9월 28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발족했다. 이들은

37) 여성신문 2017. 11. 5. ‘한샘 사내 성폭행’ 사건,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강간문화’ 드러내다. (<https://goo.gl/AhRUXJ>)

38) 한국여성노동자회·이용득 국회의원 주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실효성강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2017. 7. 6.) 발표자료

낙태 경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낙태죄 폐지’가 단지 임신이 가능한 젊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존엄과 평등·사회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⁹⁾ 이어서 9월 30일 제안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관한 국민청원”에는 23만 명이 넘는 청원동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여성 건강권·생명권 논의의 필요성, 현행 낙태죄에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빠져 있는 점을 인정하고 2010년 이후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⁴⁰⁾ ‘공동행동’은 12월 2일 세종로에서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피켓을 들고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를 벌였다.

예상대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검은 시위 다음 날인 12월 3일, 천주교는 전국 16개 교구에서 낙태죄 폐지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낙태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생명에 대한 끔찍한 폭력이자 일종의 살인행위”라며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⁴¹⁾ 그러나 11월 1일 시작된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은 한 달 동안 17명의 동의를 얻는데 그쳤다. 이제 낙태죄 폐지 반대는 점차 보수 종교계만의 소수의견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낙태 16건으로 OECD 35개국 중 낙태율이 10번째로 높다. 2016년 한해 신생아 수를 넘어서는 연간 50만 건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⁴²⁾ 하지만 2017년 낙태죄 소송은 25건에 불과했고 이중 4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낙태 시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한 사법처분도 드물며, 간혹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선고유예⁴³⁾⁴⁴⁾ 또는 징역형⁴⁵⁾으로 일관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지는 가운데, 사실상 낙태죄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잃고 사문화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공식적인’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낙태죄가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여성들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며 성적 관계에서 남성보다 더 불리한 처지라는 인식을 통해 여성에 대한 훈육이 강화되며,⁴⁶⁾ 불법화로 인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낙태 결정이나 사회적 비용, 정신적·신체적 건강 위협이 여성 개인에게만 전가된다는 것

39) 한국성폭력상담소 블로그 <http://stoprape.or.kr/702>

40) <https://goo.gl/cdx6yL>

41) 가톨릭 평화신문 2017년 12월 10일자. ‘낙태죄 폐지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https://goo.gl/Qw2M2K>)

42) 뉴욕타임즈 2018. 1. 13일자 <https://goo.gl/XsSJUP>

43) 2013년 6월, 대전지법 제3형사부 정안 부장판사는 낙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 (<https://goo.gl/eAMe5Z>)

44) 2016년 3월, 따르면 업무상축타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 유예 (<https://goo.gl/NKuz9v>)

45) 2016년 1월, 대전지법은 업무상축타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75)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https://goo.gl/sdbKpE>)

46) 양현아(2010), 낙태에 관한 다 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한국여성학 26(4).

이다. 특히 낙태에 대한 정보와 자원이 부족한 10대 소녀들과 빈곤여성의 경우 낙태 지연과 유산으로 인한 위험이 편중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⁴⁷⁾ 뿐만 아니라 합법적 낙태의 경우에도 여성은 남성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불법 낙태를 빌미로 보복하는 남성 때문에 곤경에 빠지는 등 여성의 종속성이 강화되기도 한다.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낙태를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하고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낙태가능 주수를 합의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합헌결정을 내리고, 2016년 불법 낙태수술의사 처분을 강화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 여전히, 젠더폭력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 이후, 여성들이 경험한 유·무형의 폭력이 ‘젠더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기 시작했다. 젠더폭력은 “여성에게 특정한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폭력으로 제압하며 공포 조성을 통해 기존의 남성우위적 젠더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치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이다.⁴⁸⁾ 이렇게 위계와 권력의 유지, 강화를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젠더폭력은 낯선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가정폭력이라고 부르던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뿐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의 데이트 폭력, 성폭력, 스토킹, 불법촬영물의 촬영과 유포를 통한 디지털성폭력, 학교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의 성희롱⁴⁹⁾ 등 대면적이고 사적인 관계에서 무수한 젠더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2017년에는 특히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의 젠더폭력이 이슈가 되었다. 즉각 저항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혐오발언을 일삼은 남자 교사들은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⁵⁰⁾⁵¹⁾⁵²⁾⁵³⁾⁵⁴⁾ 그들이 학생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다거나 해당 교육청이 이들을 징계했다는 후속 보도를 보지 못했다. 반면 초등학교 교실에

47) 양현아(2005), 여성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한국여성학 21(1)

48) 허민숙(2017), 젠더폭력과 혐오범죄-여성에게 대한 폭력은 혐오범죄인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3권 2호

49) 오마이뉴스 2017. 8. 20일자 ‘성희롱 피해자가 왜 ‘투명감옥’에 갇혀야 하나. (<https://goo.gl/1u2gcX>)

50) 국민일보 2017. 8. 1일자. 부안여고 성추행사건 ‘빙산의 일각’이라더니. (<https://goo.gl/ipabV8>)

51) 웃고름 매준다며 가슴 만져...제자 성추행 교사 구속 (<https://goo.gl/zBc37E>)

52) 오마이뉴스 2017. 8. 4일자 ‘몰카 교사’ 논란 여고 교장 “좋은 대학 못가면 성 팔게 돼” (<https://goo.gl/KnyRnz>)

53) 여성신문 2017. 11. 4일자 “요새 여자들은 결혼도 안 하고 문제 많아” 숙명여대 교수들의 혐오발언. (<https://goo.gl/Hd1joA>)

54) 경향신문 2017. 12. 28일자 “성폭행은 다 여자 잘못이다” 도를 넘은 교수의 강의중 부적절한 발언들 (<https://goo.gl/mAja2a>)

급속히 확산되는 여성혐오 문화를 우려하며 페미니즘을 가르쳤던 교사는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하고 개인의 신상이 털리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런 성차별적 폭력의 극단은 여성혐오 살인이다. 2017년 7월 강남의 한 왓싱숍에서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여성이 혼자 일하는 것을 확인한 남성이 손님으로 가장해 찾아와 여성 운영자를 성폭행,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⁵⁵⁾ 또한 8월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성차별적인 발언들을 ‘미러링’하는 것으로 유명한 여성 BJ ‘갓건배’를 살해하겠다고 유튜버 김윤태가 후원금을 모으고 살인 예고 방송을 하는 엽기적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주소지에 ‘갓건배’가 살지 않더라도 “여성이라면 목졸라 죽이겠다”고 하는 그의 목소리는 인터넷으로 전세계에 생방송되었다. 여성들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김윤태는 불안감 조성이라는 경범죄 처벌조치로 단지 5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귀가했다.

55) 한국일보 2017. 8.2일자. 왓싱숍 살인사건, “여혐 콘텐츠가 여성살해 불렀다” (<https://goo.gl/QcGf2z>)

4.2. 논평

우리 사회에서 현재 페미니즘은 가정과 일터에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성에게 가해지는 불평등한 처우와 차별의 현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 남녀 간 임금격차와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성별 직종분리, 불리한 고용형태 그리고 기혼여성의 결혼·임신·출산·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통계 이래 지속되고 있다.⁵⁶⁾⁵⁷⁾ 성차별적 노동문제의 대표적인 사안인 KTX 승무원의 해고무효 및 부당이익금 환수소송은 11년째 이어지고 있고,⁵⁸⁾⁵⁹⁾ 병원 간호사의 첫 월급이 10년 가까이 30여 만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은⁶⁰⁾ 이제야 알려졌다. 정치인들이 공식적인 발언에서 여성의 돌봄·서비스 노동을 저평가하고 여성비하 막말을 일삼는 동안,⁶¹⁾⁶²⁾ 여군 1만 명 시대에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더딘 진상규명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갔고,⁶³⁾ 도움을 요청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더 큰 위협에 처했다.⁶⁴⁾ 새로 들어선 정부는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9월과 12월에 두 번씩이나 발표했지만,⁶⁵⁾ 우리 연구소가 함께 하는 ‘디지털성폭력 클린센터’에서 지난 11월 수만 개 성범죄 영상을 올린 해비업로더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음에도⁶⁶⁾ 3개월이 되도록 검정에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정치와 사회가 이렇게 여성의 삶과 노동을 도구화하고 주변부화하며 뉴스거리로 소비하는 사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의 증언인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유네스코 등재에 실패하고 말았다.⁶⁷⁾

56) 한국일보 2017. 2. 21일자. 기혼여성 절반이 경력단절 ...복귀에 8.4년 (<https://goo.gl/usZ5jo>)

57) 노동자연대 2017. 3. 3일자. 여전한 성별 임금격차 100:64, 왜 이토록 불평등한가? 어떻게 싸워야 하나? (<https://wspaper.org/article/18416>)

58) 매일노동뉴스 2017. 7. 16일자. KTX 해고승무원의 잃어버린 시간 (<https://goo.gl/wiUkhk>)

59) 2018.1.16. 대전지법은 임금반환소송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노사 양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복직 등 고용합의만 남겨두고 있다 (<https://goo.gl/yTW7kC>)

60) 인사이드 2017. 10. 6일자.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원입니다” ...한 간호사의 충격 고백 (<https://goo.gl/aYpBdQ>)

61) 오마이뉴스 2017. 7. 9일자. 이언주 “뺨하는 동네 아줌마가 왜 정규직 돼야 하나?” (<https://goo.gl/R9Qdx2>)

62) 여성신문 2017. 12. 28일자. 홍준표 대표, 여성비하 발언으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https://goo.gl/7TbpYn>)

63) 노동자연대 2017. 5. 30일자. 성폭력 피해 호소 후 자살한 여성 대위를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 (<https://wspaper.org/article/18749>)

64) 한국일보 2017. 11. 21일자.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게시물 20만건이 트위터에 번진 이유는 (<https://goo.gl/w1faaR>)

65) 정부,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2017.9.26.).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 시행예정(2017. 12. 27)

66) 경향신문 2017. 11. 15일자. ‘성범죄 영상’ 3만개 올린 ‘해비 업로더’ 검찰 고발당해 (<https://goo.gl/5b69XU>)

67) 프레시안 2017. 10. 31일자. 日은 협박, 朴엔 찬밥 ...위안부 기록등재 실패 원인

그동안 젠더불평등을 설명하는 익숙한 방식은 남자와 여자라는 각각의 집단으로 묶어서 남녀 간 임금이나 고용상태의 차이, 고위직 관료와 임원의 비율, 가사노동 시간 배분 같은 수치자료로 남녀의 성 격차(Gender Gap)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미시적으로 행해지는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폭로하고 이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이들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젠더불평등 상황에 대한 이의제기가 왜곡된 노동 구조 개선과 성차별적 사회규범에 대한 논쟁으로 더 나아가지 않고 유독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검열하게 만들고 개인의 문제로 사소화시켰다면, 이제 나와 우리의 문제라고(#MeToo) 목소리를 높이게 된 방식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는 더 소외된 처지의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당사자들이 더 많은 문제제기와 함께 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정치화를 이룰 때만이 현실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체감하는 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성과와 공로는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가는 또 다른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란다.

<https://goo.gl/qj9HmP>

5.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참여할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5.1. 현황

2017년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거셌던 해다. 한편에서는 청소년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소년법폐지’안은 한달만에 29만 6천명이 동의해 민정수석 등이 나서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다. 소년법 폐지 요구는 2017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청원인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호법을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다. 어린이·청소년이 동급생 또는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또 범죄 수위가 높다는 점이 이런 요구안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어린이·청소년이며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2017년 한 해 동안 어린이·청소년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건 중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인천초등생살인사건’: 2017년 3월, 청소년 2명이 초등학교 여아를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사건이다. 두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죄, 형법의 사체손괴·유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공모공동정범으로 간주되었다. 2017년 9월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18세 피의자에게는 무기징역을, 미성년자 피의자(17세)에게는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7년 9월 1일 오후 10시 무렵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청소년보호법폐지’ 청원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다른 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중학생인 가해자들이 철제도구, 소주병, 벽돌 등을 사용해 1시간 30분여동안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의 사진을 지인에게 보냄으로써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다.
-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이 사건은 2017년 9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동

생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데 가해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동하고 있다며, 소년법폐지를 요구하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세간에 알려졌다. 글쓴이의 동생이 두 달 전인 7월 강릉 경포 해변에서 폭행당했으며, 가해자들이 폭행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릉경찰서는 이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이 사실이며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 2017년 9월 12일 천안시 신부동의 한 원룸에서 14살 여중생 두 명이 한명을 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이 피해자 폭행 영상을 SNS에 공개해 외부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부산 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 장면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 ‘서울 중랑구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2017년 9월 30일, 이영학이 14살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다. 당시 피의자의 딸은 자신의 친구를 유인하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게 해 아버지의 범행을 도왔다.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학의 처는 생전에 남편으로부터 학대와 성매매를 강요당했으며, 딸은 아버지와 똑같은 장애를 앓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의존 상태에 있었다.

청소년 범죄가 성인 못지않게 잔혹할 때마다 여론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 특히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참정권을 요구할 정도이니 범죄 행위에 대해 성인과 같은 대가를 치러야 하며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청소년의 참여할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일까?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과 안녕의 보장을 위해, 이 두 가지 권리는 동시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유엔은 참여할 권리를 “공적 영역과 정치적 결정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건강권 보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3월, 교육·인권 시민단체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너머본부)’는 유력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2017 대선 수권(授權)능력시험 교육/청소년인권 기본영역 시험’이라는 이

름의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문재인·안희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안철수·손학규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남경필·유승민 (바른정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김선동 (민중연합당) 중 남경필, 유승민, 홍준표를 제외한 7명이 응답했다. 이들 7명은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가입·활동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묻는 항목에 대해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인 4월 30일, 일군의 청년들이 “봄은 왔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장미혁명페스티벌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했다.

이어서 2017년 9월 26일, 전국의 청소년들,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청소년연대)’를 결성하고 국회의원 김상희, 박주민, 심상정, 추혜선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현재 청소년연대는 청소년참정권 보장활동(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 추혜선과 함께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청원 운동을 벌였고(2017.11.22.), 국회의원 표창원과 함께 선거연령을 낮추고 청소년들이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당법,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4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2017.11.29.).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역사는 짧지 않다. 일제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1980년대에도 청소년들은 민주화운동에 활발히 참여하며 정치적/사회적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청소년인권운동’ 형태의 청소년 참정권 요구를 비롯한 청소년 운동은 1990년 중후반 이후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만 18세 선거권’ 운동 역시 2016년 촛불 이후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1990년 후반 ‘사이버유스’의 ‘청소년사이버의회’에서 중요한 이슈였고, 2001~2003년에는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헌법소원과 관련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만 18세 선거권’운동모임인 ‘낮추자’는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때 ‘낮추자 만 18세 모의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약으로 ‘만 18세 선거권’이 등장하기도 했었다.⁶⁸⁾ 또한 2012년 총선(4월)과 대선(12월) 국면에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포함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나라운동본부(연대체)’ 등에서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진행했었다.⁶⁹⁾ 2017년의 일련의 활동들은 그간의 청소년운동의 연장선상의 활동이었다.

68)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ㅋㅋ」, 공현 외 지음, 2009, 메이데이

69)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 운동사」, 공현·뚝코 지음, 2016, 교육공동체 벗

5.2. 논평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담은 협약이다. 여기에서는 아동이 단순히 보호 대상만이 아닌, 권리를 가진 인간 주체임을 전제한다. 한국은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현실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청소년운동에 조금이라도 발을 디뎠던 청소년들은 우리는 미성숙한 존재들이 아니니 동등한 인간으로 대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왔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고 호소했다. 1995년부터의 청소년 운동사를 훑어 보면, ‘18세 선거권, 학생체벌금지, NEIS 반대, 실업계고 현장실습 정상화 요구, 학생회 법제화, 내신등급제 반대, 두발자유운동,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운동, 광우병 촛불집회, 일제고사반대, 학생인권조례제정, 기호0번 청소년 교육감후보 운동’ 등 다양하다. 정치적 참여의 권리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들이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는(헌법 10조) “국가권력으로부터의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인 자기결정권”이 수없이 침해받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현실은 ‘보호’라는 명분 하에 이러한 요구가 묵살되기 일쑤였다.

청소년인권운동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활동한 이래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청소년보호주의’에 반대해왔다. 이들이 ‘청소년보호주의’에 반대하는 이유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자유를 ‘금지’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어린이·청소년의 성장발달단계상의 취약성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 어린이·청소년은 단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금의 청소년보호주의가 정말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청소년보호주의는 청소년을 차별하고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취약성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요구와 소년법 폐지 요구는 이 문제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작년에 발생한 몇몇 끔찍한 청소년 범죄는 소년법 폐지 요구로 이어졌다. 소년법의 ‘소년보호주의’ 취지는 범죄주체인 소년의 범죄 원인이 단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이나 사회 환경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 성장발달단계상 ‘형벌을 통한 응징’보다는 ‘보호·교육을 통한 교화’가 재범률을 낮추는데 훨씬 효과적이며, 그것이 사회로

의 복귀와 재적응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 소년범들에게 성인과 같은 법을 적용하고 같은 시설에서 구금했을 때, 소년범들이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범죄 수범을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문제는 현재 소년범죄자들을 제대로 ‘보호·교육을 통한 교화’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매우 부족하고,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소년보호주의’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청소년 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소년강력법이 점차 줄어들다가 2006년부터 증가하여 2010년에는 거의 10년 전 수준을 회복했다. 두드러진 변화는 소년범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서 주된 연령층이 14-15세가 되었고 성폭력 범죄가 많아졌다는 것이다.⁷⁰⁾ 현재 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소년범의 교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소년보호주의’ 자체보다는, 입건 후 판결까지의 기간이 길다는 점, 사회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관대하며 성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회복프로그램이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2017년 11월 9일, 자신보다 27살이 어린 여중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기획사 대표가 ‘강간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성단체들은 대표적인 아동성폭력 수법인 ‘그루밍’⁷¹⁾을 행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준 것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이 소년범죄자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 범죄의 결과만을 문제 삼아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보호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인권, 교문을 넘다’⁷²⁾에서는 “누군가를 보호하려면 그 대책은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 대책들은 대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힘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래서야 청소년 보호주의가 ‘보호’라는 제 이름 값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강조한다. 어린이·청소년이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체로서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의 권리를 누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보호’라는 명분으로 통제하고 자유를 박탈하며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

70) 김봉수(2013),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책」, 법학논총 33(1), 173-197

71) 그루밍: 성폭행 전 피해자를 길들이고 유인하는 전략 행위 (여성신문 2017.11.03. (<https://goo.gl/WG6tH2>))

72) 「인권, 교문을 넘다」, 공현·박민진·배경내·오혜원·정주연(인권교육센터 ‘들’ 기획), 2011, 한겨레에듀

6. 10차 개헌 논의와 건강권

6.1. 현황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규범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조직과 행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하여 아홉 번째로 개정된 헌법이다. 이러한 ‘87년 헌법체제’는 정치 민주화와 자유권 신장을 중심으로 형식적 민주주의의 성장을 가져왔지만 불평등 심화, 승자 독식의 왜곡된 정치·경제·사회·문화 지배구조를 공고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의 헌법 개정은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한 기본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배경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1990년부터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중임제 같은 대의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최근의 개헌 논의는 2016년 6월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정세균 신임국회의장이 선출되면서 다시 촉발되었다.⁷³⁾ 이후 2016년 12월 28일 국회의원 36명으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었고, 2017년 한 해 동안 총 23차례의 회의를 진행되었다. 또한 2017년 8월 29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11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7년 2월 2일에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53명이 선정되었다. 이들 자문위원은 사법부 분과, 지방분권 분과, 경제재정 분과, 정당선거 분과, 기본권 분과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했고, 2017년 10월 각각의 분과별 개헌보고서(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가 2018년 1월에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헌 논의는 전적으로 전문가 중심의 논의에 그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도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청석 토론은 매우 제한된 시간에 불과했다.⁷⁴⁾⁷⁵⁾

국회 개헌특위 활동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도 개헌 논의를 하고 있다.

73) 출처: 한겨레신문 2016년 6월 13일자 기사 “국회 문열자마자 개헌론…정세균 의장 공개 제기” (<https://goo.gl/jMHSnV>).

74) 온라인 누리집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http://www.n-opinion.kr>)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할 수 있다.

75) 2017년 8월 24일 녹색당의 논평 “개헌국민대토론회엔 토론이 없다?”(<http://bit.ly/2mQirJU>), 2017년 9월 6일 국민개헌넷의 성명 “개헌 논의 이대로는 결코 안 된다”(<http://bit.ly/2BcotZB>)을 참고할 수 있다.

기본권과 연관된 논의로는 2017년 5월 24일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가 주최한 개헌과 사회권 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⁷⁶⁾ 2017년 6월 26일 공개된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보장 강화 연구포럼의 개헌안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⁷⁷⁾ 2017년 6월 29일에서 7월 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이 주최한 제8회 제주인권회의 “다시 인권이다 - 인권의 현재와 미래” 등이 있다.⁷⁸⁾ 이렇게 공개된 자료 외에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개헌 최종 보고서,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의 개헌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기본권분과 논의 등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국회 개헌특위 이외의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2017년 11월 28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⁷⁹⁾가 협력하여 일반 시민들의 건강권 요구를 담은 증언대회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를 주최했다. 시민들은 노동, 환경, 소비상품,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건강보험, 공공의료 등의 분야에서 건강권 피해사례를 증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헌법에 반영될 건강권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⁸⁰⁾ 이 행사가 열리기 전에는 온라인 이벤트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할 권리’란?> 페이지를 구축하여 건강권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았다.⁸¹⁾ 시민들의 건강권 외침을 이번 개헌에 반영하기 위해 이들 행사 자료와 온라인 이벤트, 그리고 건강권 관련 기고, 카드뉴스, 동영상, 기타 자료 등을 모아두는 온라인 플랫폼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http://govcraft.org/p/health-right>)을 개설하기도 했다. 한편, 늦은 감이 있지만, 국회 개헌특위도 2017년 말에 온라인 누리집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http://www.n-opinion.kr/>)을 오픈하여 개헌 논의와 관련 활동을 아카이빙하고 개헌 관련 주요 정보와 의제를 공유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개헌을 앞두고 개헌의 의미, 방향, 주요 의제를 소개하는 기획보도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향신문은 2018년 신년기획의 하나로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으로 기획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⁸²⁾ 개헌 논의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개헌 논의 자체가 광범위하다보니 건강권 같은 ‘특수한 권

76)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s://goo.gl/AjRH4d>

77) 국가인권위원회 <https://goo.gl/BfhA4R>

78) 한국인권재단 <https://goo.gl/MkU5um>

79) 여기에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를 비롯하여 권미혁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빠띠,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이 해당한다.

80) <http://govcraft.org/stories/152>

81) <http://govcraft.org/events/27>

82) 출처: 경향신문 헌법 11.0 (<https://goo.gl/KGZdLH>)

리'는 다루지 않는다고 것이다. 그러나 건강의 결정요인 측면에서 건강권은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헌법 상 기본권의 보편성 강조, 생명권과 정보인권의 신설, 토지공개념과 재산권·주거권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 건강권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6.2. 논평

앞서 이야기했듯, 제 10차 개헌 논의 자체는 권력구조 개편 요구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기본권 중심의 개헌에 대한 목소리 또한 작지 않다. 기본권의 분류 자체가 단일하지 않고 기본권들이 서로 연관되며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가리게 될까봐 특정 하위 범주를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기본권 중에서도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기본권 확대, 사회적 기본권 주체의 확대, 차별금지 사유의 확장,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성 강화, 노동권 강화, 아동·노인·장애인 권리의 독립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흔히 사회적 기본권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건강권 역시 권리성 강화, 국가 의무의 구체화, 권리주체 확대 방향의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대개 현행 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를 건강권 규정으로 간주한다.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자는 의견, 보건의료서비스 보장 받을 권리로 개정하고 인간다운 생활권(현행 헌법 제34조)의 하위 조항으로 편입하는 의견 등 건강권 개헌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건강권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으로 현행 헌법 제36조 3항의 기본권적 성격을 강조할지, 혹은 제36조의 다른 조항인 혼인·가족생활 및 모성에 관한 국가 보호와 분리하여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놓고 있다. 현재(2018년 1월 19일)까지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보건권(또는 건강권)을 신설하는 것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행 헌법 제35조제1항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⁸³⁾ 한편, 2018년 1월 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건강권 개헌(안)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안과 동일하다.⁸⁴⁾ 이는 건강에 대한 권리성을 명시하지 않고 건강권을 보건의료 영역에 한정하며 건강권 주체를 ‘모든 사람’이 아닌 ‘국민’에게 한정한, 그리고 의무주체와 의무내용이 추상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2017년 11월 28일 열린 건강권 시민증언대회와 인터뷰에

83) 출처: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http://www.n-opinion.kr/?p=1700>

84) 2018년 1월 8일 공개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의 건강권 조문시안은 다음과 같이 제33조3항과 같다. (출처: http://www.n-opinion.kr/?page_id=126)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 제34조 ③, ④항 삭제; 조문시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로 이동) ③ 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사람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현행 제34조 ⑥항 삭제; 조문시안 제13조로 이동)

서 시민들이 건강권 제안한 내용은 건강을 해치는 다양한 생활환경의 문제(건강결정요인), 제3자의 건강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건강/의료보장, 건강과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건강권 개념은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우선, 헌법 전문(前文)에 기본원리로서 ‘생명과 건강 존중의 원리’가 포함되어야 하고, 건강권은 현행과 같은 부속 조항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건강권의 속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결정요인과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소극적 의무, 시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헌법상 여타 기본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차별금지, 노동권,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권, 환경권, 주거권 등의 강화가 중요하다.⁸⁵⁾ 향후 이러한 내용이 헌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하고 반영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85) 제OO조 ① [건강에 대한 권리성, 보편적·비차별적 권리로서의 건강권]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성별, 연령, 지역, 고용 형태, 장애, 성적 정체성과 지향,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②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제도·정책·서비스의 기획과 실행에서 제1항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소극적 건강권] 국가는 제3자의 건강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④ [적극적 건강권, 공공의료 확충] 국가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제도·정책·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수준의 공공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⑤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서비스의 기획, 실행, 평가 과정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출처: http://www.n-opinion.kr/?page_id=126)

7. 모두의 건강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 정부의 대활약

7.1. 주요 사건들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면서 미국인의 단결을 호소했다. 그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자국의 산업을 희생하면서 외국의 산업을 번창시켰고, 미국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의 국경을 지켰다며 이런 상황이 ‘미국에 대한 학살(america carnage)’이라고 규정했다. 무역, 세금, 이민, 외교 등 모든 결정이 미국 노동자와 미국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⁸⁶⁾ 자유, 정의, 평화 같이 과거 대통령들이 흔히 사용하던 단어 대신 이전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보호(protect)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한 새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혹평을 내놓았다.⁸⁷⁾ 미국 정치 언론 폴리τικο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노한 대중’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트럼프를 지지할지 관건이라고 평했다.⁸⁸⁾

트럼프 취임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1월 21일, 미국 워싱턴을 포함해 미국 전역,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는 반(反) 트럼프 여성 행진이 있었다. 여기에는 여성 단체뿐 아니라 미국 내 풀뿌리 조직들이 총 집합하여 여성 인권, 성소수자의 권리, 인종 평등, 종교의 자유, 노동권, 환경권, 이주 개혁, 건강보험개혁 등 다양한 가치를 내걸고 행진을 벌였다. 워싱턴에서 약 50만 명, 미국 내에서 약 500만 명이 참여한 이 시위의 주최자들은 ‘우리’들이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모욕당하고 위협받았으며 악마화되었다고 말했다. 이 때 ‘우리’란 이민자, 성소수자, 미국 선주민, 흑인과 동양인,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생존자 등 다양한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다.⁸⁹⁾ 다양한 차별에 직면하여 위협받게 된 ‘우리’들이 정치적 연대를 통해 세력화할 것임을 공표한 여성 행진에서 트럼프 정권은 상징적, 실질적 위협의 주체로 지목되었다. 트럼프는 여성비하적 언행을 일삼았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가치를 위협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86) 중앙일보. <https://goo.gl/pPn1DC> 2017.01.21.

87) 허핑턴포스트. <https://goo.gl/t3jiyA> 2017.01.21.

88) Politico. <https://goo.gl/AZSe9J> 2017.01.20.

89) 오마이뉴스. <https://goo.gl/Uubi5i> 2017.01.25.

상징적 인물이다. 이 글에서는 2017년 1월 시작된 트럼프 정부의 행보가 세계인의 건강과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트럼프 정부의 강경외교정책과 한반도 북핵위기

2017년 4월 7일 미국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응하여 약 60~70발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 불과 일주일 후 트럼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 IS 근거지에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폭탄으로 여겨지는 공중폭발 대형폭탄(MOAB)을 투하했다. 외신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폭탄 투하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지 질문했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분열과 정복' 전략 대신 직접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는 강경외교정책 노선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⁹⁰⁾

미국의 강경외교 기조는 올해 내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8 북한이 화성 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라는 단어를 쓰며 비판했고,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종용하며 '로켓맨(rocket man)의 자살임무(suicide mission)',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언급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에 대해 '미국의 늑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응수했다. 핵단추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은 불안해하며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이후 북한은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9월 6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언급하며 전방위 대북제재에 나섰다.⁹¹⁾

이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트럼프 행정부 역시 남북대화를 지지하면서 북한과 관계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강경한 대북제재로 인해 더욱 고달파진 북한 주민들의 삶은 외면하면서 자신의 더 크고 강력한 핵 단추를 자랑하는 미국 대통령의 트윗⁹²⁾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난 11월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을 비활성화시켰던 (이제는 퇴사한) 트위터 직원의 생각이 궁금해질 따름이다.

●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90) 한국일보. <https://goo.gl/5783M5> 2017.05.07.

91) 연합뉴스. <https://goo.gl/c5daCP> 2018.01.17.

92)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핵 단추가 항상 책상 위에 있다'고 했는데 나는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는 사실을, 굶주린 정권의 누군가가 그에게 제발 좀 알려주길 바란다." 2018.01.02.

2017년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 2015)이 미국에 가장 불리하다면서 미국과 미국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중 기후변화는 거짓말(hoax)이며, 중국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파리협정이 자국에 피해를 주고 다른 국가에 이익이 되는 협정이라며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가 미국에 경제적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임 미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국장 지나 맥카시(Gina McCarthy) 등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 등 자국 내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에너지를 비롯해 경제적 영향력에서도 중국 등에게 지배력을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임 대통령들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인사들도 파리협정 탈퇴 결정이 무모하고 자기파괴적인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⁹³⁾

미국의 기후협약 탈퇴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등에서는 주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국기후연맹(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을 조직했고, 미국 내 주요 기업들 또한 파리협약을 계속해서 지지하겠다고 하며 ‘We are still in’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이런 움직임들 덕분에 미국의 탄소배출량 감소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탈퇴로 다른 국가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이 커졌고, 미국이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절감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녹색 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지원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기후변화 공적개발원조 지원금 역시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⁹⁴⁾

● 오바마 케어 폐지 부결, 그리고 조세감면

트럼프 정부는 2017년 내내 적정부담의료법(Affordable Care Act, ACA), 즉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위해 분투했다. 건강보험가입 인구 확대를 목표로 하는 오바마 케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보험가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시에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메디케이드 적용 확대를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정책이다. 오바마 케어 실행 이후 2010년 미국 국민의 16%에 달했던 무보험자 숫자가 2015년 9.1%로 감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미국

93)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7-20호. <https://goo.gl/rFh14X> 2017.06.19.

94)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 국제협력 전망: 리더십의 실종. <https://goo.gl/8UmQgg> 2017.01.16.

의사협회지에 “미국의 보건의료 개혁: 지금까지의 진전과 다음 단계”라는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삼아 당선되었고, 취임 후 첫 행보로 오바마 케어 관련 규제 완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화당 상·하원에서 각각 새로운 건강보험법, 일명 트럼프 케어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부유층과 건강보험회사의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노인층, 빈곤층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각 주에서 건강보험 보장범위와 관련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의회에서 의안 폐지가 필요한 오바마 케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Uninsured Rate Would Peak Under GOP Health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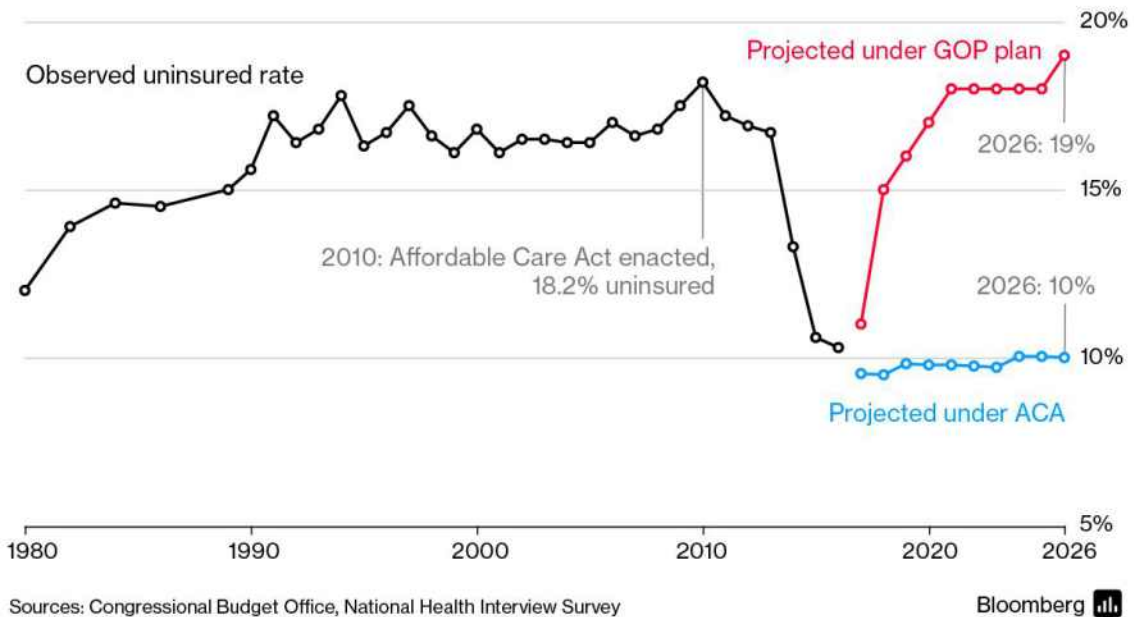


그림 12 현재의 오바마 케어와 공화당 개혁안에 따른 건강보험 미가입자 숫자 추계

2017년 초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하원이 제시한 법안이 실행될 경우 연방예산 약 387조 원이 절감되겠지만 무보험자의 숫자는 10년 후 5,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⁹⁵⁾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케어가 수백만 미국인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신 일부 부유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설명했다.⁹⁶⁾

미국 전역에서 오바마 케어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했다. 이들은 오바마 케어 폐지 법

95) 한국일보. <https://goo.gl/g6GRJP> 2017.03.14.

96) 서리풀 연구통. 건강정책의 정치: ‘오바마케어’인가 ‘적정부담의료법’인가, 아니면 ‘트럼프케어’인가? <http://health.re.kr/?p=3592> 2017.03.17.

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항의 전화를 걸고, 집회와 캠페인을 벌이며 오바마 케어의 장점을 설명했다.⁹⁷⁾ 공화당 의원들은 지역구의 타운홀미팅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에 찬성하는 것을 두고 유권자들의 강한 질책에 직면해야 했다.⁹⁸⁾

이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 역시 매우 높았다. 일례로 15년 넘게 심야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지미 키멜(Jimmy Kimmel)은 자신의 쇼에서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던 자신의 아들이 오바마 케어가 아니었다면 기저 질환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을 것이라며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소득과 무관하게 죽지 않아도 될 아이들이 죽어서는 안 되고,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Graham-Cassidy bill)을 제출한 상원의원 빌 캐시디(Bill Cassidy)가 오바마 케어를 대체해야 할 새로운 법안은 소위 ‘지미 키멜 시험(Jimmy Kimmel test)’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⁹⁹⁾ 키멜의 주장은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후 키멜은 건강보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면서 오바마 케어를 적극 옹호하고, 정책의 구체적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이를 폐지하려는 공화당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을 이어나갔다.¹⁰⁰⁾ 이전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관료들 역시 법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케어 홍보와 광고 예산을 삭감하고, 고위 관료들의 보험가입권장 행사 참여를 막아선 것에 대응하여 ‘Get America Covered’ 캠페인을 조직하여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공백을 메우고 나섰다.¹⁰¹⁾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 역시 단일보험자 제도와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를 주장하면서 오바마 케어 폐지 반대 캠페인에 나섰다.¹⁰²⁾

결국 오바마 케어를 축소,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시도는 미국 시민들의 적극적 저항으로 인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¹⁰³⁾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건강보험가입에서 선택의 자유 강화를 명목으로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시키려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에서 연방정부가 제공하던 비용분담보조금¹⁰⁴⁾ 지급을 중단

97) Politico. <https://goo.gl/uR1Hse> 2017.07.05.

98) Washingtonpost. <https://goo.gl/4DBqrE> 2017.02.25.

99) 관련 발언을 했던 CNN 인터뷰에서 캐시디 본인은 자신이 제출한 법안이 지미 키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언론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미상원 의원들이 법안의 파국적 결과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오바마 케어의 무조건적 폐지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100) CNN Politics. <https://goo.gl/qxNZBr> 2017.09.20.

101) <https://www.getamericacovered.org/>

102) New Republic. <https://goo.gl/zyjQZ6> 2017.09.23.

103) Lambrew JM. Lessons from the Latest ACA Battl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17 Nov 30;377(22):2107-9.

104)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기에는 소득이 높지만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대략 연소득 30,000\$ 이하)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2017년 오바마 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약 카이

하겠다고 선언하자, 의회에서는 보험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용분담보조금을 유지하는 법안(Alexander-Murray Bill)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안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연방 정부 섯다운을 피하기 위해 법안 의결이 연기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¹⁰⁵⁾

오바마 케어 법안을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공격하는 대규모 세계 개혁안이 2017년 말 의회를 통과했다. 2017년 12월 미국 상·원은 각각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약 1,630조 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개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며, 오바마 케어에서 보험가입의무 조항을 폐지한다. 관련해서 미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메디케어 재정이 연간 약 250억 달러(약 27조 원) 가량 삭감되고 이 외에도 학자금 대출, 개별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오바마 케어 재정, 그리고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재정이 감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언론기사는 건강보험 가입의무조항 삭제는 연방정부가 향후 10년간 약 3,300억 달러(359조)의 지출을 줄이는 대신 빈곤층은 아니지만 값비싼 건강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가구들(미국 빈곤선 4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98,400 이하)의 건강 보장을 각자의 운에 맡기도록 던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¹⁰⁶⁾

●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7가지 금지어

12월 16일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의 정책 분석 담당 공무원들이 2019년 예산관련보고 설명회에서 7개 금지어를 전달받았다고 보도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공개된 금지어는 ▲취약한(vulnerable) ▲수혜자격(entitlement) ▲다양성(diversity) ▲트랜스젠더(transgender) ▲태아(fetus) ▲증거기반(evidence-based) ▲과학기반(science-based) 등이다. 하나같이 우리 연구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내용들과 관련있는 단어들이다. 설명회에서는 금지어에 대한 대체 용어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예컨대 ‘증거기반’ 혹은 ‘과학기반’이라는 말은 ‘공동체의 상식과 희망을 고려한 과학에 근거하여(based on science in consideration with community standards and wishes)’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¹⁰⁷⁾

저 재단에 의하면 1,200백 만 명의 인구 중 700백 만 명이 보조금 지급 자격을 충족했고, 연방 정부는 여기에 약 70억 달러(약 7.6조 원)를 지출했다.

105) USA Today Network. <https://goo.gl/DRLOmF> 2017.12.20.

106) Fortune. <https://goo.gl/Pra41M> 2017.12.04.

107) 경향일보 <http://bit.ly/2FSpoSv> 2017.12.17.

논란 직후 CDC 책임자인 브렌다 핏츠제랄드(Brenda Fitzgerald)는 CDC에 금치어 같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예산관련 제안을 과대 해석한 것이며, 사용 금지가 아니라 가급적 다른 말을 사용할 것에 대한 제안 정도였다는 CDC 내부자의 인터뷰도 이어졌다. 예산확보가 중요한 사안들을 설명하는 보고서에서 예산 청중인 공화당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정치적 제스처를 설명한 것일 뿐 해당 단어들에 대한 전면적 금지가 아니라는 것이다.¹⁰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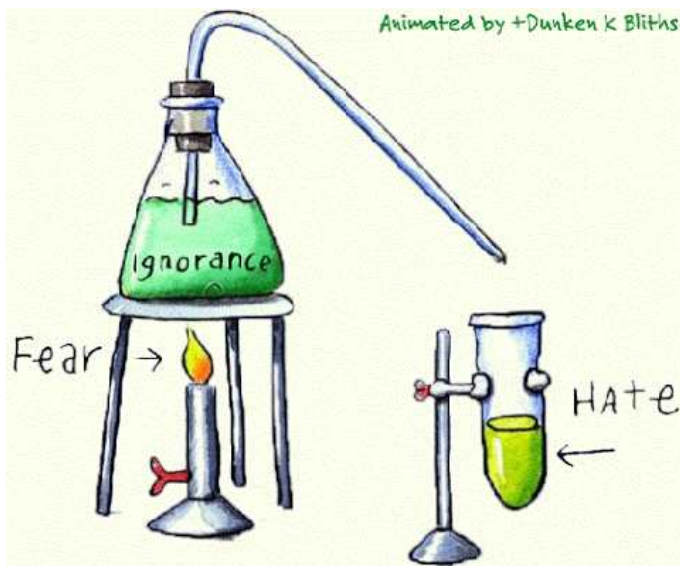
이들의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예산보고서를 작성하는 CDC의 이같은 내부 방침 혹은 전략은 충분히 우려스럽다. 또한 중요한 연구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로 그런 고려를 하게 된 상황 그 자체가 문제적기도 하다. 사람들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데올로기적 단어 사용과 특정 단어 지우기를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미 많은 정책 문서에서 태아(fetus)를 태어나지 않은 미국인(unborn American)이라는 말로 대체했고, 2020년 인구조사에서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질문들을 삭제하였으며, 여러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기후변화 관련 항목을 지워나가고 있다.¹⁰⁹⁾

108) Vox. <https://goo.gl/KG87E6> 2017.12.21.

109) Vox. <https://goo.gl/SEmRaC> 2017.12.21.

7.2. 논평

2016년 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매일 미국인과 세계인들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이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외교·안보적으로 신고립주의 노선으로 급격하게 선화한 트럼프 정부는 소위 ‘대안 사실(alternative fact)’ 운운하며 언론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말 폭탄 전쟁을 벌였고, 지난 12월 6일에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공표해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2018년 1월 열린 이민정책 회의에서는 미국이 왜 ‘똥통(shit-hole)’ 같은 나라 사람들을 받아줘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고,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거대하고 강력한 아름다운’ 장벽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안 협상도 진행 중이다.¹¹⁰⁾ 취임 1년 만에 국정 수행 지지율 37%라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으면서도,¹¹¹⁾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뽀랄까, 굉장히 똑똑하고 (like, really smart), 매우 안정적인 천재(very stable genius)’라고 떠벌이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리고 2018년 1월 20일 현재,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관련 예산과 멕시코와 미국 사이 장벽 건설 예산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미국 연방 정부는 섧다운을 선언한 상태이다.¹¹²⁾



2016년 옥스퍼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을 뽑았다. 이는 실제 진실보다는 개인적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한다. 탈-진실 시대와 그런 시대의 정치를 몸소 보여준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 덕분에 2017년 한국의 시민들은 내내 불안과 공포, 놀라움을 멈출 수 없었다.

110) 문화일보. <https://goo.gl/vgrthD> 2018.01.18.

111) 한겨레. <https://goo.gl/QyV2hg> 2017.11.08.

112) Wikipedia. <https://goo.gl/Vgxp8>

영화 식코(Sicko)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은, 트럼프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조장하며, 이를 혐오로 바꾸어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¹¹³⁾ 끊임 없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적대하면서,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정치는 익숙하면서도 놀라웠다. 미국 CDC에서 드러난 ‘말(word)의 정치’ 또한 징후적 현상이라 할 수 있었다.

세계화와 그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는 소위 선진국 시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파레냐스는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기존 정부와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 치솟고, 정치적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한편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통해 경제적 양극화가 승인된다고 분석했다.¹¹⁴⁾ 이러한 분석은 미국의 상황에 잘 들어맞으며 한국에서도 대체로 유효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기후변화, 자유무역, 건강보장처럼 우리들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매우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사실과 증거를 무시하면서 감정적 신념을 퍼뜨리고, 그에 따라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행사해버리는 세력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113) The Guardian. <https://goo.gl/rj94QW> 2017.04.21.

114) 살라자르 파레냐스, 문현아 옮김. 세계화의 하인들. 2009. 여성문화이론연구소.

8.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 부동의 1위: 미세먼지

“올해 가장 중요한 환경보건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던 국민여론조사에서 1위는 ‘초미세먼지 오염심각’, 2위는 ‘살충제계란 파동’, 3위는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이 차지했다.¹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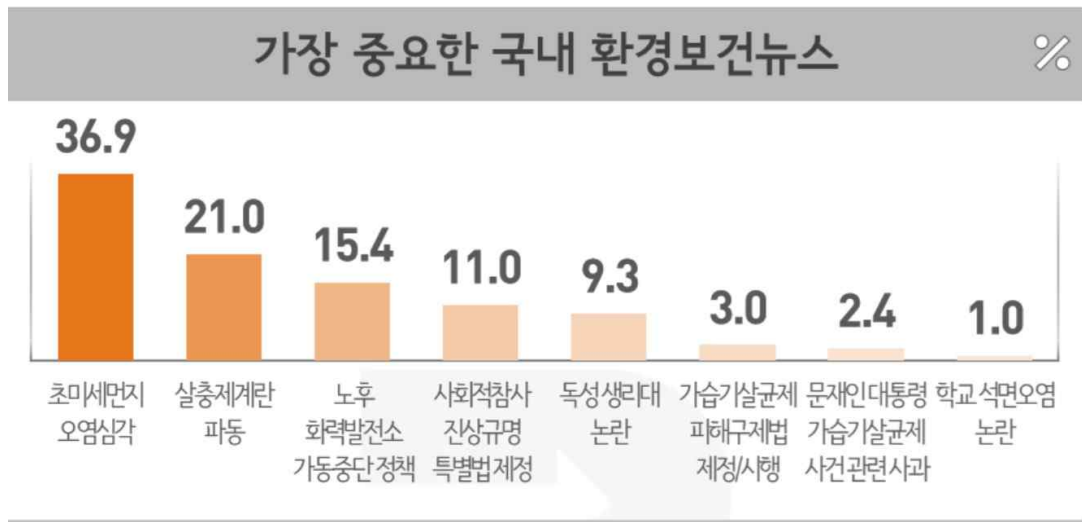


그림 13 시민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국내 환경보건뉴스’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미세먼지 오염심각 36.9%, ▲살충제계란 파동 21.0%,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정책 15.4%,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11.0%, ▲독성 생리대 논란 9.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 및 시행 3.0%, ▲문재인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사건관련 사과 2.4%, ▲학교 석면오염 논란 1.0% 순으로 나타났다.

계층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미세먼지 오염을 지적한 응답은 2016년 미세먼지 (PM10) 월별 대기오염도 기준치의 상위권에 분포한 서울(38.4%), 경기/인천(40.7%), 충청(40.5%) 지

115) 이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12월 18~20일 동안 시행한 조사로, 2017년 11월말 현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연령별, 계층별로 구분해 1,035명이 휴대전화 웹조사방식에 응답한 결과이다. 신뢰구간은 95%, 표본오차 수준은 ± 3.1%p, 응답률3.8%였다.

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경기1위, 인천3위, 충남4위, 서울5위, 세종7위, 충북8위, 대전10위).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정책과 독성 생리대 논란은 세대별로 또렷한 차이를 보였다. 노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정책을 지적한 응답은 50대(24.6%)와 60세 이상(20.6%)에서 많고 20대(4.6%)에서 적었던 반면, 독성생리대논란은 20대(22.3%)의 응답이 많고 60세 이상(1.7%)의 응답은 적었다. 한편 ‘독성생리대 논란’을 꼽은 응답은 여성(13.3%)이 남성(5.1%)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11년부터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문제 1순위에 항상 오르고 있다. 2017년 겨울의 경우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비교적 추위가 일찍 찾아오고 북극 한파 등의 영향으로 대기오염문제가 덜 심각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12월 하순부터 스모그가 심각해져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가 대기오염 비상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차량에 한해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출퇴근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시행하여 차량통행량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미미했고 민간분야를 포함한 차량2부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0년에 1만 7천 명이 조기 사망했다고 하고 2060년이 되면 5만2천 명으로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한다”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석면 피해

현재 환경보건법에 의거한 법정 환경성질환은 석면, 가슴기살균제, 시멘트공장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 3가지 뿐이다.

먼저 석면피해를 살펴보자. 2017년 한해 동안 환경성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508명이었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악성중피종암, 석면폐암, 석면폐, 미만성 흉막비후 등 네 가지 질환에 걸린 피해자 중 일부이다. 2011년부터 2017년 말까지 7년 동안 인정된 석면피해자는 총 2,842명이고 사망자는 1,107명이다. 약 200여 명의 직업성 석면피해 산업재해 인정자들은 제외한 숫자이다.



그림 14 2017년 9월초, 과천시 학부모들의 석면 항의집회

2009년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석면피해자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로 인한 석면노출이 계속되고, 석면 노출 후 10년에서 40여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에 질환이 발병하는 특징 때문이다. 특히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전국 1,200여개의 학교에서 부분적인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안전조치의 미비로 인해 석면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도시 곳곳에서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한 석면오염문제도 계속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 노후한 석면슬레이트 문제도 심각하다. 석면 피해구제법 인정자의 상당수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이다. 석면 슬레이트와 석면광산으로 인한 피해는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고 학교석면문제는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의 문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표 7 2017년 주요 환경보건사건 특징

	가습기살균제	석면	살충제 계란	독성 생리대
피해 대상	어린이, 산모, 노인 등 전 연령대	모든 국민, 특히 학교이용자	전 연령대, 어린이 취약	생리대 사용 모든 여성
피해 규모	제품사용 350~400만명, 병원치료 30~50만	석면학교이용자, 재건축 현장 인근주민, 과거 석면공장/석면광산 인근주민, 석면관련 업종 종사자 및 일반시민	수만~수백만? (모름)	수십만~수백만? (모름)
피해 신고	5955명 (2011~2017년12월말), 2017년에만 614명 신고	2011~2017년말까지 2842명 환경성질환 인정, 2017년에만 508명 인정	현재까지 없음	3009명, 15000명 소송카페가입
사망 신고	1292명 (2011~2017년12월말까지), 2017년에만 110명 사망신고	2011~2017년말 인정자 2842명 중 1107명 사망	현재까지 없음	현재까지 없음
제품 이름	옥시썩썩, 애경가습기메이트, 대형마트 PB (롯데 와이즐렉, 이마트 이플러스,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LG 119가습기세균제거 등 43종	주로 건축자재;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건물 실내 천장마감재, 칸막이재, 불연내장재, 브레이크 마찰재, 석면섬유재 등	일반 계란, 친환경인증 계란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팬티라이너, P&G, 유한 김벌리 등 10개사 제품 모두 검출 (조사 정확도 관련 논쟁 있음)
제품 판매량	33개 제품 9,980,714개 (확인된 부분만)	석면원료 사용량 200만톤 이상	오염계란 수 확인 안됨	확인 안 됨, 최근 3년간 생산되거나 수입돼 시중에 유통 중인 전체 생리대는 56개 회사의 896개 제품
판매 기간	1994년~2011년 (이후 회수기간동안에도 소량 판매)	1960년대부터 2004년 전후, 2009년부터 전면사용금지	모름~2017년 (계속 확인 중)	모름~현재진행
건강 피해	급성, 만성 폐섬유화 동반한 폐 손상, 천식, 태아피해 3개 질환 부분적 인정	악성중피종암(흉막, 복막, 심막), 폐암, 석면폐, 미만성흉막비후, 후두암, 난소암 등	모름, 양계장 노동자 농약노출원인으로 다발성골수종 발병사례 보고	생리주기변화, 생리불순, 난소 혹 등
원인 물질1	살균제, 살생물제	석면(asbestos)	살충제, 농약	접착제 외 확인 안 됨
원인 물질2	PHMG, CMIT/MIT, BAC, PGH, DDAC 등	석면함유제품	피프로닐, 비펜트린, DDT, 에톡사졸, 피리다벤, 플루페녹수론 등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 22종); 벤젠,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스타이렌 등
위해성	폐질환, 호흡기질환, 천식 등 전신독성, 발암성의심	WHO 그룹1 발암물질	발암성 등	발암성, 생식독성, 피해 자극성 등
제품 조치	사용금지 및 권고, 의약외품 지정,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	2009년부터 전면사용금지, 그러나 이전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등이 계속 문제됨	회수폐기, 간헐적으로 오염계란 확인되어 폐기	깨끗한나라 릴리안제품 3대형마트판매중단, 제조사 환불, 제조중단, 전 제품대상 VOCs 등 유해

				물질 검출조사 진행중
역학 조사	2011년 질병관리본부 실시, 이후 질환별로 관련연구 진행 중, 전체피해조사 및 추가역학조사 시급함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악성중피종암, 석면폐암, 석면폐, 미만성흉막비후 등 4개 질환 구제대상인정	진행안함, 필요성 제기됨	필요성 제기되어 환경보건차원에서 환경부가 추진 중이나 제대로 안함
배경	2011년 초 산모 7명 원인미상 폐 손상 서울아산병원입원 절반 사망, 역학조사 의뢰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2017년 유럽 벨기에 살충제 달걀사건 발생, 한국에서도 조사 필요성 제기	2014년 미국 시민단체 여성의 소리에서 생리대 문제제기
관련 법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제정, 화학물질 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제정, 살생물질법 제정 추진, 환경보건법 개정 추진,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	석면피해구제법(환경성), 산업안전보건법(직업성) 등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및유기식품등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환경보건법 외 식약처 관련법률 등
사법 조치	형사고발, 2016년 18명 구속, 2017년 말까지 2심판결(14명 구속), 추가고발 추진, 민사소송 진행중	학교, 재건축 등의 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중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환경보건시민센터 농축산부 장관, 식약처장 전현직 각 3명씩 형사고발, 피해자 민사소송은 현재까지는 없음	민사소송 추진중 (여성환경연대)
친환경 문제	인체무해, '아이에게안심' 등의 허위광고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동안 전국 초중고, 유치원 ,특수학교 약 1200여개에서 부분적으로 석면철거 진행되나 탈법,위법행위로 오염 심각	친환경인증제품 다수 포함	회사이름 '깨끗한나라', 제품이름 '순수한면', 국내 팬티 라이너 최초 COTTON USA획득, 순수안심 100%순면커버 등 광고문구
유사 제품	스프레이형 제품, 방향제, 세정제 등, 원인물질 사용제품 등 다수	유리섬유는 석면이 아님, 간혹 석면함유제품이 불법적으로 수입됨.	양계, 육계 오염의심	아기기지귀, 성인용위생용품 등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피해 신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33-9085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식약처 1399, 농식품부	식약처 1577-1255
시민 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www.eco-health.org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www.eco-health.org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cofem.or.kr

●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한국사회가 경험한 가장 심각한 환경보건 문제이자 소비자 문제라 할 수 있다. 2011년 정부 역학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었음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기업의 무책임으로 5년 동안 방치되다가 2016년 검찰수사로 대학교수와 기업관계자 등 16명이 구속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은 판매량이 가장 S고 피해자도 가장 많았던 옥시레킷벤키저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를 배경으로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약 4천여 명의 피해신고가 이어졌다.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진상규명은 아직도 충분치 않다.

2017년에도 614명의 피해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110명이 사망자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대략 350만~400만 명이고 이중 그 중 10%에 해당하는 30만~50만 명이 병원치료를 받았을 것이라는 정부용역연구의 추계를 고려해본다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비교적 오래 전에 이루어졌고, 당시 소비자 대부분은 가습기살균제가 사람을 죽게 하고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와 기업의 소극적 대처는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마침내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한 2월에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1월에는 세월호참사와 더불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피해로 인정되는 질환이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어 실제 피해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의해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 2018년부터 2020년 동안 활동을 전개하고 특별검사제가 가동되어 미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이 절실한 이유이다.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건강피해사건이 재발되지 않는 안전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주민건강피해

충북과 강원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시멘트 공장들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문제는 사실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리적으로 동떨어져 있고 해당 기업의 책임회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에 걸친 환경부의 연구용역에 의해 시멘트공장과 주민 건강피해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그 피해규모도 파악되었다. 환경분쟁제도를 통해 기업책임도 물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이를 회피하면서 장기 법정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 살충제 계란과 독성 생리대

살충제 계란과 독성 생리대 문제는 2017년을 뜨겁게 달군 환경보건 사건들이다. 국민 대부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이자 대다수의 여성들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용품에서 독성물질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두 사건 모두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다. 두 문제 모두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국가의 식품안전, 생활용품 안전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다

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가슴기살균제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피해를 규명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서둘러 봉합하려는 관성으로 흐지부지 되었다. 특히 독성 생리대 문제의 경우, 처음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에 며칠 만에 3천여 명의 여성들이 피해신고를 했는데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비난을 받았다. 이후 환경부에서 환경역학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 논평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로 인해 사람과 생태계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이 위협받는 문제를 환경보건문제, 환경성질환이라고 부른다. 1980년대 공해문제와 공해병이라고 불렀던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동안 환경문제의 관심이 생태계보호에 집중되다가 이 글에서 사례로 든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석면, 가슴기살균제, 살충제 계란과 독성 생리대 등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환경보건문제는 피해의 규모가 엄청나고 영유아와 산모, 노인 등 생물학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다.

9. HIV 감염과 차별, 그리고 건강

9.1. 현황

● 에이즈, HIV 감염에 대한 관심 고조

2017년 4월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에이즈가 창궐했는지 아냐?”는 질문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며 에이즈, HIV 감염에 대한 관심도 고조시켰다. 5월에는 창원에서 HIV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추정하고 확진 판정 후 잠적했다는 왜곡된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10월에는 용인 여중생 HIV 감염인과 부산 20대 지적장애여성 HIV 감염인에 대한 왜곡된 보도들이 쏟아졌다. 언론들이 HIV 감염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낙인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11월에는 시각장애와 편마비가 있는 HIV 감염인이 국립재활원에서 재활 치료를 거부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HIV 감염인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도 차별받는다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 해였다 (그림16).



SBS 홍준표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창궐?”
(유튜브 화면 캡처) 2017.04.26



창원인뉴스 “에이즈 감염, 걱정 대신 20분만에
확인하세요.” 2017.10.27

그림 15 HIV/AIDS에 대한 사회의 시선

● HIV 감염자 관련 주요 사건 보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하지만 그 진위를 균형 있게 다루지 못했던 세 사건을 살펴보자. 2017년 5월 30일 창원보건소는 HIV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있다고 발표했고, 언론들은 해당 감염인이 확진 판정 이후 잠적했으며 최근까지 성매매를 했다고 보도했다.¹¹⁶⁾ 확진 판정 후 잠적과 성매매는 모두 사실 무근이었으며, 창원보건소 또한 잠적을 주장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언론은 이 여성이 성매매를 한다는 선부른 추정을 했으며, 이 여성을 당장 찾지 않으면 HIV 감염이 확산될 것처럼 부적절한 공포감을 조성했다.

2017년 10월 11일에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여고생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이 보도되었다. 증거 부족으로 성매수자들에 대한 수사는 종결되었다. 그러나 언론은 성매수자들의 추가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성매수자를 피해자 위치에 두는 동시에, 에이즈 확산 공포를 부추겼다.¹¹⁷⁾



그림 16 에이즈를 다룬 일간지 만평
(2017.10.19. 조선일보)

2017년 10월 18일에 보도된 사례는 더욱 심각하다. 부산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또는 2급, 기사에 따라 상이함)인 HIV 감염 여성의 성매매 적발 사건은 HIV 감염과 에이즈에 대한 세간의 이목과 관심을 최고조로 집중시킨 가운데 비난 여론 또한 극대화된 사건이었다. 해당 여성은 2010년에 HIV 감염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2017년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하다 경

찰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들은 일제히 HIV 감염, 2010년 성매매 적발, 2017년 성매매 다시 적발이라는 일련의 상황을 조합하여 해당 여성의 피의 사실을 강조하며 고의적인 가해자로 낙인찍었다.¹¹⁸⁾ 하지만 정작 여성단체들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사실과 달랐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여성은 언어적 이해와 표현력이 미숙할 뿐 아니라 사회적응력이 약

116) 중앙일보. 2017.05.30., 조선일보. 2017.05.30., 쿠키뉴스. 2017.05.30

117) 중앙일보. 2017.10.11., 부산일보. 2017.10.11., 한국일보. 2017.10.13., 서울신문. 2017.10.11., JTBC 뉴스. 2017.10.11.

118) 중앙일보. 2017.10.19., 연합뉴스. 2017.10.19., 한국일보. 2017.10.19., YTN. 2017.10.19., 조선일보. 2017.10.19.

만 7세 아동의 수준에 불과했다. 이 여성이 성매매를 하도록 만든 것은 남자친구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판단과 독립능력이 미약한 장애여성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이다.¹¹⁹⁾

119) 한겨레21. 2017.11.13.

9.2. 논평

언론사들은 경쟁적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정적인 표현을 쏟아냈지만 정작 사건의 진위 여부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못했다. “에이즈 의심 성매매 여성”, “에이즈 파문”, “ 공포감 확산”, “부산 에이즈녀”, “충격”, “비상”, “에이즈 포비아”, “죽음의 병” 같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들은 HIV 감염인을 가해자로 몰아가고 낙인화하는데 일조했을 뿐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보호받고 보상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고 HIV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도 모자라 비난 받고 치료 받을 권리까지 빼앗긴 건인가? HIV와 에이즈에 대한 교육이 불충분하고 그로 인한 무지가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고, 젠더불평등에 기초한 성매매 문제도 혼재되어 있다.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차별하는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사회 안전망의 부재도 주요한 영향요인이다. 사회에서 질병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재생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미디어의 사실 왜곡과 공포 조장, 낙인 강화, 감염인의 배제와 타자화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HIV 감염과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는 것이 HIV 감염과 AIDS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일 수 있다. HIV 감염과 에이즈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언론보도에서 HIV 감염을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AIDS)로 혼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HIV 감염과 에이즈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언론보도에서 HIV 감염을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AIDS)로 혼용하고 있다.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란,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며,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인 CD4 양성 T-림프구가 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어 파괴되므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인체의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이러한 감염증과 종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태를 에이즈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한다.¹²⁰⁾ 최근에는 HIV 바이러스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으므로 HIV에 감염되었어도 치료를 잘 받으면 면역력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다. 즉, HIV 치료의 개념이 만성질환의 치료

120) 질병관리본부 HIV/AIDS 정보 ([바로가기](#)).

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HIV의 완치는 불가능하다.

HIV 감염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 번의 성관계로 HIV에 감염되는 비율은 0.1~1% 수준이고, 특히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한 감염자는 체내 혈액이나 체액에 있는 바이러스가 줄어들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확률이 96% 급감한다고 한다.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한 감염자가 콘돔을 쓰면 사실상 감염 위험은 '0'으로 떨어진다.¹²¹⁾ 부산에서 성매매로 적발된 20대 HIV 감염인의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해왔으며, 지난 8월 보건소 검사 결과 혈액에서 HIV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성매수자들의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해당 여성의 피의 사실, 성매수자의 피해가 강조되는 보도들이 난무했다.

HIV와 에이즈에 대한 예방 교육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HIV 감염과 에이즈는 성적 문란함과 비도덕성과 연결되어 인식되는 질병이다. 따라서 HIV 감염인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HIV 감염과 에이즈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 HIV 감염인에 대한 접근 방식은 그들을 잠재적 전파자로 간주하고 색출하여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전략이 주를 이룬다. 조기 검진과 조기 치료, 감염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염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낙인을 없애는 방식의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2017년 HIV 감염인과 에이즈 관련사건 보도에서 성판매-구매 이슈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고생에게 대가를 지불하며 성을 구매한 구매자들,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착취한 남성과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의 성을 구매한 구매자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불쌍한 피해자로 다루어지는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6년 HIV/AIDS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신규 HIV·AIDS 감염인은 1199명이며 그 중 남성이 1105명, 여성이 94명, 국내 남성 감염인 셋 중 한 명이 20대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HIV 감염인을 통제하고 관리하기보다 성 접촉 빈도가 높은 인구집단에 대한 HIV 예방에 대한 교육이 더 효과적인 예방 전략일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의 진료거부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 2017년 11월 6일 시각장애와 편마비가 있는 HIV 감염인이 국립재활원에서 재활치료를 거부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이 기사화되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HIV 감염인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의료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HIV 감염 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을 받지 못한 응답자가 26.4%, 약속된 입원을 하지 못한 이는 18.6%. 치료, 수술, 입원 시 감염 예방을 이유로 별도의 기구나 공

121) 질병관리본부 HIV/AIDS 정보 ([바로가기](#)).

간을 이용해야 했던 이는 40.5%, 의료인으로부터 동성애 등 성정체성을 혐오하는 발언을 들은 이는 21.6%, 협진을 하지 않은 다른 의료인들에게 감염 사실이 누설된 경험이 21.5%라고 한다.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니 장기 치료나 장기 요양을 받는 것은 고려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우선 의료적인 문제에서라도 감염인 차별을 해소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인 안전망 확충은 HIV 감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슈이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감염인 의료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감염인 중 48.3%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감염 여부가 밝혀지면 일터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단절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직이 어렵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소득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포기하고 기초수급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HIV 감염인들은 적절한 치료와 보호, 보상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HIV 감염과 AIDS에 대한 차별과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미디어의 왜곡된 보도, 근거가 없는

공포감 조장, 낙인 강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미디어로 인해 성차별적 통념과 편견, 혐오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는 사회의 책임을 논의해야 할 때 아닐까? HIV/AIDS네트워크와 장애여성공감 "에이즈 확산이 두렵다면 떠들썩하게 '추적'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완화시켜 검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미디어는 사건과 질병을 불필요하게 연결시키는 보도를 지양해야 하며, 감염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자극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기본적인 인격권 보호조치를 유념해야 한다.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3길 36, 2층

전화 : 02-535-1848 / Fax : 02-581-0339

홈페이지 : <http://health.re.kr> / 전자우편 : phikorea@gmail.com

후원계좌 :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